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연구책임자

홍 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한종민(통일연구원 연구원)

KINU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KINU 연구총서 22-24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저자	홍민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리드릭(02-2269-1919)
I S B N	979-11-6589-122-0
가격	6,500원

© 통일연구원, 202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9
----	---

Chapter I

서론	17
----	----

1. 문제인식	19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25
3. 이론적 관점과 적합한 분석틀	31

Chapter II

전략국가론의 개념과 내용 변화	45
------------------	----

1. 전략국가의 개념과 용법 변화	47
2. 전략국가 사용 빈도와 사용 배경	56
3. 전략국가의 의미체계와 메시지	70

ChapterIII

핵무기 기술시스템과 전략국가론	75
1. 기술시스템 진화 과정으로 본 핵무기 고도화	77
2.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와 대미협상 전략	81
3. 핵무기 고도화 전략과 전략국가론의 함의	109

ChapterIV

결론	125
참고문헌	130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3

〈표 Ⅱ-1〉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별 전략·정책용어 강조 내용	57
〈표 Ⅱ-2〉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별 ‘국가’ 관련 전략·정책용어 강조 내용 ..	59
〈표 Ⅱ-3〉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 『노동신문』 등장 건수	65
〈표 Ⅱ-4〉 ‘전략국가’ 및 ‘전략적 지위’ 『노동신문』 월별 건수	67
〈표 Ⅲ-1〉 1차 핵무기 고도화기 주요 핵·미사일 활동	82
〈표 Ⅲ-2〉 1차 핵무기 고도화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88
〈표 Ⅲ-3〉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합의 이행구조의 재구성	93
〈표 Ⅲ-4〉 비핵화 대 상응조치 협상 모색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	96
〈표 Ⅲ-5〉 북한과 미국의 북핵 접근방식 차이	103
〈표 Ⅲ-6〉 대미 압박 및 핵무기 고도화 재개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103
〈표 Ⅲ-7〉 2021년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밝힌 전략무기 개발 계획	106
〈표 Ⅲ-8〉 바이든 정부의 대북 메시지 결정적 타이밍	107

〈그림 Ⅰ-1〉 중국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로드맵	38
〈그림 Ⅰ-2〉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로드맵	39
〈그림 Ⅰ-3〉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로드맵	39
〈그림 Ⅱ-1〉 북한의 전략국가 개념도	53
〈그림 Ⅱ-2〉 북한의 전략국가 용법 변화 추이	55
〈그림 Ⅱ-3〉 『노동신문』 사설 등장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60
〈그림 Ⅱ-4〉 『노동신문』 사설 등장 '강성국가', '선군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60
〈그림 Ⅱ-5〉 『노동신문』 사설 등장 '강국', '주체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61
〈그림 Ⅱ-6〉 『노동신문』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 중 핵과 평화 관련 용어 빈도와 추이	62
〈그림 Ⅱ-7〉 전략국가 용어 사용 배경과 북미 주요 정세 대응	69
〈그림 Ⅱ-8〉 북한 전략국가론의 의미체계	72
〈그림 Ⅲ-1〉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대미 협상 전개	81
〈그림 Ⅲ-2〉 북한의 미사일 연도별 발사 패턴과 국방기술현대화 4개년 계획 ···	84
〈그림 Ⅲ-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별 발사 횟수	86
〈그림 Ⅲ-4〉 북한의 대미협상 요구 프레임 변화	95
〈그림 Ⅲ-5〉 김영정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	101
〈그림 Ⅲ-6〉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면화에 따른 비핵화 개념 변화	101
〈그림 Ⅲ-7〉 북미 양자의 협상 접근 방법의 차이	102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기 고도화와 대미 억제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내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 국가전략과 향후 군사 및 대외 행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핵전략 관련 공식 담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전략적 지위’와 ‘전략국가’라는 두 용어에 주목한다. ‘전략적 지위’란 용어는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와 9월 제5차 핵실험 이후 사용이 본격화됐다. ‘전략국가’라는 용어는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성공 직후 처음 등장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지위’는 핵보유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전략국가’는 등장 당시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실제 타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 두 용어 모두 핵무기의 기술적 성취에 따라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이 확고해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의 전략적 의도와 기술적 성취, 대외정책 등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으로 이 두 용어에 주목했다. 이 두 용어의 사용빈도, 의미와 용법은 조성되는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해 왔다. 그만큼 이 용어들의 등장과 사용은 계산된

전략적 의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용어와 정세의 역동적인 변화 추이를 교차해 가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목표’, ‘정책적 행보’, ‘전술적 대응’ 등을 살펴본다. 이런 인식 아래 다음에 주목한다.

우선 용어 자체의 의미 변화, 용법 변화의 측면이다. ‘전략국가’란 용어는 사용 초기에는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실제 타격할 수 있는 국가란 의미,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등장했다.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국가, 전략적 위상에 맞게 대외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의미로 용법이 변화해 왔고 2022년에는 지역과 동아시아의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가져오는 ‘전쟁억제력’을 가진 국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와 용법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전략국가를 통해 기대한 효과의 측면이다. ‘전략국가’ 용어의 등장 시점과 용법의 변화로 볼 때, 북한이 기대한 효과는 우선 대외적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 두 번째로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국방력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차원, 세 번째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함축하는 차원 등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메시지의 용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달라진 전략적 지위에 맞는 관계 개선과 대우를 해야 한다는 대미 ‘요구’와 기대’를 함축한 ‘자기규정’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전략국가 용어의 수사적 활용의 측면이다. ‘전략국가’는 김정은과 지도부의 전략적 욕구가 투영된 용어이자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실용적 목적의 용어, 주민들에게 통치 성과를 ‘전략국가’라는 하나의 프레임 통해 각인시키는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전략국가’라는 용어에 담겨진 북한의 전략적 욕구, 수사적이며 실용적인 활용의 가

능성을 파악해 본다.

넷째, 전략국가론과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 사이의 관계다. ‘전략국가’나 ‘전략적 지위’는 핵·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이나 단계적 도약, 일정한 모멘텀 설정을 위해 선연적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의 기술적 진전 여부가 사실상 ‘전략국가’의 실질적 가치 및 능력을 가늠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의 고도화 과정은 다양한 기술적 난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타개하고 기술적 도약을 이뤄내는 힘겨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 진전 이상으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기술적 연계 속에서 이뤄진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등이 결합된 ‘핵무기 기술시스템’의 건설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전략국가론’과의 정치기술적 상관관계 측면에서 조망한다.

살펴본 결과,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라는 두 용어는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 정세 변화 등에 맞춰 용법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일관된 의미체계를 가지고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용어들은 주로 대외적으로 미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국내적으로는 리더십 강화와 국가성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프로파간다로 사용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대미 전략적 메시지 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의미로 구성돼 있다. 첫째, 핵보유국의 대등함, 둘째, 대미 억제력 확보, 셋째, 북미 관계 개선 등이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로 일방적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끝이 났고 미국과 대등해졌다는 메시지다. 둘째, 핵무기 보유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적대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다. 셋째,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메시지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이 두 용어는 목표한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에 맞춰 대미 억제력 확보,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 지위 확보, 미국 및 관련국과의 관계 개성 등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정책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함의한다. 첫째로 핵보유국 인정을 통한 협상 구도 변경 및 북미 관계개선, 둘째로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북한식 핵군비통제’와 ‘북한식 상호안전보장’체제 마련, 셋째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금의 한반도 질서를 수정하는 ‘북한식 현상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 핵보유국, 협상전략, 핵군비통제, 핵군축, 상호 안전보장

North Korea's Strategy Country Theory and the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Hong, min

North Korea's Kim Jong-un has been using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since he came to power, with nuclear capability building a top priority. In order to predict the mid- to long-term national strategy and future steps of the Kim Jong-un regim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analyze the official nuclear-related discourse that North Korea advocate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terms 'strategic status' and 'strategic state' that the Kim Jong-un regime emphasizes as policy terms. The term 'strategic status' began to be used in earnest after the 7th Party Congress in May 2016 and the 5th nuclear test in September. The term 'strategic country' began to be used shortly after the success of the Hwasong-15 ICBM on November 29, 2017. Both of these terms are used to mean that North Korea's status as a nuclear power has been solidified through the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nuclear weapons.

This study focused on these two terms as a 'window' into the

strategic inten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dvancement. The frequency of use, meaning, and usage of these two terms have changed agilely according to the prevailing circumstances. Through these two terms and the dynamic change of the situation, we examine the 'strategic goals', 'policy moves', and 'tactical responses' that the Kim Jong-un regime has pursued through the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ollowing.

First of all, it is an aspect of a change in the meaning of the term itself and a change in usage. The term 'strategic country' was initially used to emphasize the meaning of its strategic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but its usage has changed to assert a resetting of international status and external relations as a country that has gradually grown in strategic importance. it has been And recently, it is explained at the national level that has 'war deterrence' that prevents nuclear war in the region and East Asia and brings strategic balance to the world. Analyze the meaning of these changes.

Second, it is the aspect of the expected effect from the strategic state. Judging from the change in timing and usage of the term 'strategic state', North Korea has a strategy and policy that enhances its negotiating power with the US externally, gives its people pride in its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power, and implies a change in its actual military strategy. It seems that the term was intended. 'Self-regulation' implied 'self-expectation' that it has become a country with strong physical power like a

nuclear weapon, has become difficult to treat itself with nuclear weapons, recognizes the strategic value appropriate to this, and needs to establish relationships and be treated according to the changed status. It can be said that the term of

Third, it is the aspect of rhetorical and practical use of strategic state terms. “Strategic state” is a term that reflects the strategic desires of Kim Jong-un and the leadership, a term for the practical purpose of securing a negotiating advantage, and a term that defines the results of government as a frame for the residents.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strategic desire and understanding contained in the term ‘strategic state’, and the possibility of rhetorical and practical use.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ategic state theory and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The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can be said to be a political and technological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of a technological system and the theory of the strategic stat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se two terms have a consistent semantic system despite certain changes in usage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ituation. These terms were mainly used as a policy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externally and for public propaganda domestically. The meaning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parts, and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the main audience. First, the equality of nuclear powers, second, securing deterrence against the US, and third,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irst, as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it is argued that the era of unilateral threats from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is over and it has become equal to the United States. Second, it is used to mean that it has secured deterrence against the US military threat by possessing nuclear weapons. For this reason, we demand the cessation of hostile acts such as the ROK-U.S. joint exercise. Third, it acknowledges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and insists on a transition from an armistice to a peace regime and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the end, these two terms can be said to be ‘policy terms’ for claiming to secure deterr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secure an equal negotiating pos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ndividualiz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countries in line with the targeted technological evolution of nuclear weapons.

Keywords: strategy state, strategic status, nuclear armed state, negotiation strategy, nuclear arms control, nuclear disarmament, mutual security

I. 서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1. 문제인식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 최근까지 핵무기 고도화를 통치의 중심에 놓고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안보 차원에서 핵무기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대외정책 및 대미전략의 핵심 수단, 리더십과 통치체제 강화의 기제로 활용해 왔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과 시각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왜, 얼마나 했는지를 설명하는 ‘전략적 의도’와 ‘핵능력’에 초점을 맞춰 왔다. 북한 지도부의 핵무기 개발의 정치적·군사적 차원의 전략적 의도, 무기 개발의 기술적 진전 수준 및 전술적 의도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와 해석들은 전략적 의도에 대한 평가에서 중장기 목표와 단기적 목표,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목표, 목표의 수정과 변경, 단계적 세부화 등을 구분하지 않는 혼재된 설명, 의도와 실재를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 평가나 인상주의적 평가에 기댄 측면이 다분히 있다. 이들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대체로 일관된 전략적 의도와 개발 프로세스, 애초부터 비핵화 의도가 없는 협상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핵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은 일종의 대북한 인식에서 하나의 상

식처럼 여겨져 왔다. 본 연구자 역시 이런 시각과 해석에 입각해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이런 매끄러운 상식을 잠시 흔드는 현상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례’(exceptional case)를 통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함께 전했다.^{1/} 이로부터 한 달여 후인 12월 22일자 『노동신문』은 전날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최사의 하이라이트를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 “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이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2/} 이어 12월 25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미국 본토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걷어치우고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개발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3/} 이후 2018년 4월까지 『노동신문』 사설, 논평,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등 비중있는 지면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 시작

1/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대성공,” 『노동신문』, 2017.11.29.

2/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노동신문』, 2017.12.22.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노동신문』, 2017.12.25.

했다.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것은 ‘전략국가’라는 용어다. 기존에 북한 매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용어의 등장이란 것도 있지만, 그 의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미국 본토를 실제로 핵무기로 위협 가할 수 있는 국가’란 의미로 ‘전략국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차적 의미는 미국에 대한 핵위협 능력인 것이다. 김정은 발언 그대로 직역한다면, ‘전략국가’는 미국에 대한 ‘실제적 위협’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한편 추가적으로 북한은 자신을 “세계에 몇 안 되는 핵강국”으로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닌 책임 있는 전략국가”로도 표현하고 있다. 결국 핵 보유 여부, 미국에 대한 핵 위협 능력 여부에 기초하여 높아진 위상으로 지역 및 국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이후 ‘전략국가’란 용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중요 매체의 사설, 정론, 그리고 김정은 연설 등 비중 있는 지면과 발언을 통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의 과거 사용 내역을 살펴보았으나 사용 전례가 없었다. 다만, 유사한 용어가 확인됐다. 바로 ‘전략적 지위’란 용어였다. ‘전략국가’의 용법과 유사하게 미국이 핵강국에 들어선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됐다. ‘전략적 지위’란 용어는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의 김정은이 사업총화보고에서 총 4차례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4/} 이후 ‘전략적 지위’는 2016년 9월 9일 제5

4/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미국은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전략적 지위를 언급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노동신문』, 2016.5.9.

차 핵실험 이후 급격히 사용이 증가했다.

이 두 용어 사용의 공통점은 첫째, 핵능력의 특정 도약(핵실험, ICBM)에 맞춰 등장했다는 점, 둘째, 전적으로 미국을 겨냥하여 미국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용어라는 점(“미국은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공화국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달라진 국가 위상에 대한 인정 시위(“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지도부에 의해 기획된 전략·정책용어라는 점이다.^{5/}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용어는 등장시기와 의미 차원에서 보면, 여타의 전략·정책용어와는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 핵무기의 고도화와 국가 위상 규정에 특화된 용어라는 점이다. 정리하면, 이 두 용어의 등장 초기 의미는 핵무기 능력의 도약, 미국에 대한 실제적 핵위협, 변화된 국가 위상의 인정 요구다. 둘째로 핵무기 고도화와 국가 위상을 지시하는 준비된 ‘기획 용어’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에서 기술적 도약과 성취, 외부의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전환점’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용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의 이후 사용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본격적 사용 이후 어느 순간 갑자기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고 핵보유국가라는 직접적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용 빈도로 본다면, 그런 변화 시점은 정확히 2018년 4월 20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은 북한이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핵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발전 총력집중’을 선언한 날이다.^{6/}

5/ 전략·정책용어란 대내 통치와 대외정책의 전략적 방향과 기초,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담론과 그것을 함축하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홍 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1.

6/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진행-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시었다,” 『노동신문』, 2018.4.21.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불과 며칠 앞 둔 시점이었다. 4월 21일 이후 이 두 용어의 사용 빈도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의미 역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는 평범한 의미로 변화됐다. 기존 핵무기나 핵보유를 지시하던 수사적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이 용어가 다시 예전의 의미와 용법으로 점차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말, 2019년 초부터다.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지다 결국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시점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미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직후부터다. 다시 핵보유국가로서 위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담화, 2021년 당 제8차 대회를 경유하며 최근까지 이 두 용어는 지역과 국제정세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스케일의 의미로 변용된다.

최근 이 용어의 사용 빈도는 최초 등장 시기만큼 많지 않지만 중요도는 여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매체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투적 단어가 아니라 『노동신문』의 사설, 정론, 김정은 연설이나 기념사 등 무게감 있는 당의 전략노선과 성과를 표현하는 지면에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지도부의 정책적 의지와 방향성을 담고 있는 전략·정책용어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용어의 변화를 보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용어들이 보인 빈도와 용법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용어들을 통해 북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들 용어들의 변화와 반복적 재생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북한 지도부의 기술적 과시에 대한 강박적 태도, 변화하는 정세와 미국 태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 지위 변화와 현상 변경에 대한 조급함, 핵무기 고도화를 통치의 중심에 놓는 과도한 정책 몰입, 핵 능력 신장에 대한 성과주의적 압박 등이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용어들의 변화 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은 매끄럽고 단선적이고 일관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과정은 직면하는 정세와 상황, 기술적 난관과 성취, 미국의 태도, 현상변경 욕구, 성과주의 등 중층의 여러 어려움을 돌파하고 변경하고 우회하며 문제에 대응해 가는 악전고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용어들은 북한 지도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기대, 성취 및 인정욕구, 위협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장단기적 지향점 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핵무기 고도화는 대부분의 핵무기 개발 국가에서 발견되듯, 표면에 드러나는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과 기술적 성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과 변수로 가득 차 있는 불확실한 과정의 연속, 다기한 전술적 응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부의 핵무기 개발 의지와 전략 구상, 개발 시스템의 구축, 가용자원의 동원과 집약, 기술적 난관의 돌파, 지역 및 국제정세의 흐름과 저항, 대미 협상 여건의 변화, 정치적·법적 프로세스, 전술적 타이밍 설정, 핵무기 프로파간다 등 다양한 요인과 변수들의 복잡한 함수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하나의 일관된 전략적 의도와 매끄러운 과정으로만 보기 힘들다. 실제로는 기술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법적, 사회적 차원의 다기하게 제기되는 문제와 변수들의 연속이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에 직면해 임기응변과 전술적 대응, 실패와 변경, 수정과 우회 등이 끊임 없이 이뤄지는 과정들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라는 매끄럽게 상식화된 블랙박스를 열면,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과정들의 실제들(realities)을 발견할 수 있다. 일종의 단선적인 하나의 ‘고도화 과정’이 아니라 기술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법적,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돌출과 저항, 전술적 좌절과 우회로의 설정, 기술적 도약과 딜레마 등 다양한 문제의 갈래가 복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을 본다는 것은 전략적 의도(목표), 개발 의지와 전략(추진체계), 실제 과정(실행), 문제와 난관(문제 인식), 전술적 대응(문제 해결), 시스템 공고화(지속성 확보) 등에 대한 다층적, 입체적, 체계적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 과정의 실제들을 보면, 단선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의 축적보다는 다층적인 문제화 양상,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혼재, 연속과 불연속, 단절과 역진, 우회와 퇴행 등이 반복되는 과정을 발견하게 된다.

이 연구는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의 사용 시점, 용법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지향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를 기초로 북한이 전개해 오고 있는 전략국가론과 핵무기의 고도화, 대외 협상이 어떻게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이 용어를 통해 북한의 국가전략, 핵전략, 협상전략의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가. 전략국가론의 개념과 사용 시점

‘전략국가’라는 용어는 2017년 말 새롭게 등장한 전략·정책 용어

다. 전략·정책용어는 대내통치와 대외정책의 전략적 방향과 기초,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담론과 그것을 함축하는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⁷⁾ 북한매체에 새로운 정책을 지시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는 대체로 지도부가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알리고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용어의 등장과 사용, 지속은 해당 용어가 지시하는 전략과 정책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와 집중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한 ‘국가’ 관련 전략·정책용어를 식별하고 그 변화의 추이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도출해 냈다. 이런 추이 파악 속에서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 용어가 어떤 시점에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전략국가’ 용어는 ‘전략’과 ‘국가’라는 용어의 사전적 지시성과 맥락에서 보면, 국가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 정책담론 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장 시기나 사용 개념이 대내외적으로 조성된 정세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략국가’ 용어가 언제, 어떤 개념과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빈도분석,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전략국가론의 의미와 용법 변화

‘전략적 지위’와 ‘전략국가’ 용어는 등장 초기에는 북한이 생각하는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핵무력 건설’의 결정적 도약에 맞춘 용어의 성격이 강했다. ‘전략적 지위’가 5차, 6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표현하는 용어로 등장했다면, ‘전략국가’는 화성-15형 ICBM 발사 직후 미국 본토를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라

7) 위의 책.

는 의미로 등장했다. 그러나 대화 분위기로 정세가 변화하면서 핵보유국을 강조하거나 미국을 위협한다는 직접적 표현은 빠고 북미정상회담과 같이 중대 정세 변화를 만들어낸 김정은의 역량이나 역내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온건해지고 열어진다. 2021년부터는 세계정치와 국제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정치군사적 위력과 종합적 국력이 강한 국가, 핵무력 정책을 통한 안전 담보 등으로 좀 더 세계 및 지역정세 스케일과 핵무기를 통한 안전 차원의 위상으로 조명된다.^{8/}

정리하면, ①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또는 미국 본토 핵무기 타격 가능한 국가 → ② 정세 전환 주도 및 지역 차원의 전략적 역할 국가 → ③ 세계가 공인하는 세계정치의 영향력 있는 국가 등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국가적 지위에 대한 자기기대를 투영한 측면과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현상변경 욕구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 초기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용도에서 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지역안보에서의 역할론으로 확장한 것이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세계정치와 국제정세에 영향력 행사국으로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용법 변화를 미중 전략경쟁, 미러 갈등, 동북아 군비경쟁이라는 정세의 흐름 속에서 해석한다.

다. 핵무기의 기술적 발전과 전략적 위상의 연동

전략국가 용어는 핵무기 고도화의 기술적 진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

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3.1.1.

와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직후 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해 본격 사용되었다는 점은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와 이 용어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핵무기가 다종화되고 기술적 성취가 이뤄질 때 전략국가의 용법도 방어적 자기규정(자위적 억제력)에서 적극적 자기 지위 표명 쪽으로 변화해 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이런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적 진화는 미국에 대한 핵무기 위협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위협을 느낄만한 무기, 미국이 위협을 인식하고 대북한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 무기의 과시와 이 용어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핵무기 고도화의 기술적 진화 과정을 주요 무기 개발 시점과 연계하여 파악한 후 전략국가론의 등장과 용법 변화와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라. 포괄적 핵독트린과 전략국가론의 억제수단화

‘전략국가’의 개념과 주장 내용 속에는 핵보유국가로서 핵무기 국제 질서에 대한 입장, 핵무기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 핵무기에 대한 포괄적 운영방안 등이 함축돼 있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보복, 세계가 공인한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 핵보유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등이 북한이 전략국가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전략국가란 용어 자체만으로 하나의 포괄적인 ‘핵독트린’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전략국가라는 프레임을 통해 핵보유국가의 기정사실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미 억제력 과시 메시지,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간의 핵군축 또는 핵군비통제, 핵보유국 지위 속에서의 관계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볼 있다.

본 연구는 전략국가 주장 속에 담겨진 독트린적 성격과 전략국가 프레임을 통해 이 용어를 일종의 억제효과 차원, 억제 수단화하고 있는 측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 전략국가 프레임 통한 대미 전략

북한의 전략국가 주장은 맥락상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미국을 주요 청자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은 전략국가 프레임을 통해 두 가지 차원에서 대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단기적인 대미 협상 차원이다. 북한도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가이며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전략국가론’ 통해 환기시키고 대등한 협상 및 교환 구도를 만들기 위한 차원의 담론전략이다. 북미관계 및 대외관계의 재설정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차원이다. 핵보유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자기규정적 프레임 성격을 갖는다. 그 프레임 안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보유국가로서의 인정, 대등한 외교관계 설정, 정상적인 대외관계의 재설정, 무역의 다각화, 정상국가화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갈등 구도, 한·미·일-북·중·러 대치 전선이라는 기회공간을 활용하여 전략적 존재감을 표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전략국가’ 프레임을 통해 미국에게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바. 동북아 군비경쟁 대응한 무기개발 차원

북한의 ‘전략국가’ 주장은 지정학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북한의 주변국들은

모두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거나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 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의 보유,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2010년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개발 경쟁, 일본 및 한국의 전력 증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대미 억제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비경쟁 속에서 전략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사안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불안감, 국력과 재래식 전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의 격차 등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동북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군비경쟁은 북한에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실질적 대응의 측면, 역으로 주변의 군비경쟁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를 정당화는 측면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국가’ 주장이 동북아 군비경쟁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실질적인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담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사. 대내 권력 공고화 및 상징적 권력 차원

‘전략국가’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국가의 전략적 지위 상승을 대주민 통치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의도의 차원 역시 중요하다.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 두 용어는 대주민 선전의 차원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담론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매체는 크게 대내 청중을 대상으로 한 매체, 대외적 메시지 발신에 목적을 둔 대외매체, 노동신문과 같은 대내외 모두를 대상으로 한 매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두 용어는 세 매체 모두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가 대내외 모두를 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용어는 여타 정책용어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다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중요 정치 행사, 노동신문 사설, 정론 등의 비중 있는

지면을 통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대내적 정책 선전의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략국가’ 프레임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성 확보, 군부에 대한 통제와 장악력, 경제발전전략 차원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전략국가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의도하는 대내외 전략과 의도를 파악하고 향후 행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략국가론으로 함축되는 북한의 전략적 태도, 지향점, 내부 통치 및 발전전략을 예측함으로써 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 대응 전략 및 평화 공존방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한다.

3. 이론적 관점과 적합한 분석틀

가. 북한 공식 메시지 독해

북한 공식매체의 분석은 쉽게 말해 밀과 왕겨를 분리하는 과정에 비유되곤 한다.^{9/} 북한 매체의 상당 부분은 일상적인 선전이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와 패턴이 무의미한 선전, 장식화된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장식음을 걷어내고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 과거와 비교하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적인 분석의 틀과 오랜 훈련이 필요한 작업이다. 어쩌면 실제 의미와 장식적 무의미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한다.^{10/}

9/ Rachel Minyoung Lee, *Understanding North Korea's Public Messaging: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NCNK, 2022), p. 5.

일부 안보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 공식매체에 대한 분석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의 공개적 ‘말’은 허풍이 많고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말처럼 실체는 그렇게 심오하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거나 대부분 과시적인 위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기저에는 북한의 ‘말’은 진실하지 않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본다면, 이 둘은 결코 분리돼 있지 않다. 보통 북한의 공개된 메시지는 과장, 과시, 경고 등과 축소, 은폐, 생략 사이에서 북한 지도부가 직면한 상황과 기대를 교묘하게 드러낸다. 다만, 메시지를 드러내는 강약, 정도, 반복, 변주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말과 행동의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 둘은 함께 한다. 그리고 최소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재현되거나 변주되는 경우 지도부의 정세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행동에 앞서 전조처럼 등장하는 용어나 정세 해석, 결정의 채택이다. 또는 행동 이후 행동을 정당화하는 용어와 상황 설명, 의미 부여이다. 한편 공개적인 담화나 입장 표명이 단순히 엄포나 형식적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주고 받은 서신의 내용은 당시 공식 매체를 통해 공개했던 북한의 입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11/} 내적인 절박함이나 좌절이 공개적인 담화에서는 거친 비난과 과장된 경고로 표

10/ 홍 민, “(한반도) 북한이라는 블랙박스 열기,” 『내일신문』, 칼럼 2022.11.1.

11/ Robert Carlin, “The Real Lessons of the Trump-Kim Love Letters,” *Foreign Policy*, August 13,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8/13/north-korea-trump-kim-jong-un-love-letters-diplomacy-nuclear-talks/>> (검색일 2022.10.31.).

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북한은 자국의 언론을 철저하게 당적 체계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당 선전선동부가 모든 일체의 매체의 구성, 편성, 관리, 감독 등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완벽한 통제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공개적인 메시지가 갖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통제된 만큼 통제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오히려 의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공개 메시지는 어떤 것을 공개하고, 어떤 수준에서(level), 누구에게(audience), 그리고 언제(timing), 어떻게 프레임(frame)화하느냐에 있어서 극도로 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체의 용어와 미디어의 패턴을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현재 생각과 미래의 의도를 통찰할 수 있다.^{12/} 다음은 이민영 연구를 토대로 북한 공식 메시지 분석을 위한 구성 요소들을 재구성해 보았다.

발화자 위상(Level)

- 누가 말하고 있는가?
- 메시지 화자(speaker)의 위상, 비중, 매체의 종류, 화자와 사안의 조합 수준
- 가령 화자의 위상이 높을수록 메시지의 중요도가 증가
- 가령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위상이 낮거나 침묵할 때,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의도, 공세를 위한 명분 축적 등

^{12/} Rachel Minyoung Lee, *Understanding North Korea's Public Messaging: An Introduction*, p. 5.

청자(Audience)

- 메시지가 누가를 향하고 있는가?
- 내부용, 외부용, 내외부 혼용
- 청자에 맞춘 매체 선택, 매체의 제한성은 메시지의 파급력에 대한 정치적 계산
- 정책 성과 및 일관성의 유지, 외부 청자 떠보기, 정책 운신 공간 확보 등
- 외부 정세, 북한 당국의 대외적 행동을 내부로 전파하고 싶지 않을 때
- 내부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과 결속력을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차원

타이밍(Timing)

- 언제 메시지를 내놓는가? 어떤 속도로 반응하는가? 왜 이 시점에 내놓는가?
- 타이밍은 특정 사안이나 문제에 대한 민감성, 중요도, 신중함의 지표
- 반응의 빠름과 느림으로 민감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안의 파급력, 관심도, 활용 의지, 선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반응의 속도는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해 취했던 속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
- 침묵(silence)이나 지극히 느린 반응은 사안의 전개를 관망하거나 예의주시, 대응의 논리를 축적하는 차원

음색(Tone)

- 어떻게 메시지를 표현하는가?
- 사용 용어의 격식과 품위 정도, 표현의 양과 정도 등

패턴(pattern)

- 메시지의 반복성, 상황과 소재에 따른 메시지의 등장 반복성
- 말하는 화자에 따른 메시지 소재와 수위

변주(variation)

- 메시지와 용법, 의미의 변화
- 동일 용어나 메시지가 상황과 타이밍에 따라 의미 변화

의미체계(system of meaning)

- 특정 용어나 메시지가 주장하거나 의도하는 내용의 체계

행동(behavior)

- 메시지 전후에 나타난 행동

위의 구성요소에 입각해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를 추적할 경우, 우선 ‘발화자 위상(level)’은 주로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김정은 및 핵심 엘리트 등의 지도부 담화 및 연설글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청자(audience)’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내적으로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략국가’ 및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가 갖는 포괄성과 외교적 어법으로 볼 때,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 등에도 자신의 지위를 과시해야하는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청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화자의 수준이 당기관지와 지도부 담화 수준이라는 점에서 메시지 비중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청자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사실상 이 용어는 주요하게는 미국을 대상으로 고안되고 대내외적인 포괄적 청자를 대상으로 기획되고 준비된 용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 용어가 갖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타이밍(timing)’의 측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핵실험이나 ICBM과 같은 중요 전략무기 실험의 성공 시점에 맞춰 이 용어가 등장하고 빈도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이 시기에는 핵무기의 직접적 표현이 사라지고 의미가 완화되는 양상도 발견된다. 이렇게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빈도, 용법이 변화했다는 것은 이들 용어들이 의도적으로 특정 타이밍을 위해 고안되었고 특정한 목적에 봉사하도록 의미화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톤(tone)’에서도 시기별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용어의 등장 초기에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표현도 노골적이고 적극적이었다면, 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자기규정, 국가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일반 용법 수준의 용어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핵무기를 강조하고 미국을 포함하는 용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연속선상에서 ‘패턴(pattern)’이나 ‘변주(variation)’ 역시 특정 시기를 경유하면서 변화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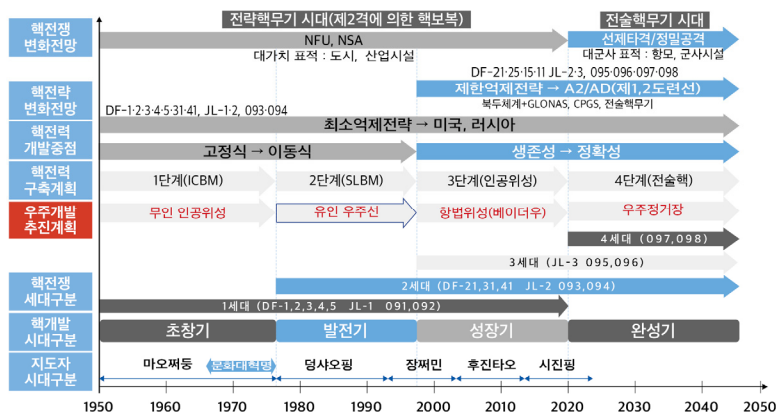
‘의미체계(meaning)’ 역시 큰 변화가 있었다. 표면적 사용 용법 변화와 더불어 의미체계도 변화했지만, 기저에 깔려있는 이 용어의 목표와 지향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다. 가령 대등한 지위, 억제력 확보, 평화적 공존의 의미체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포괄적 의미로,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및 국제정세, 세계의 전략적 안정

에 중요한 국가로 확장된다. 그러나 기저에는 미국에 대해 대등한 지위, 억제력 확보, 평화적 공존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의도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바뀔 경우 이 용어의 생명력도 사라질 수 있다.

나. 유사 사례와의 대비: 기술적 경험과 진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기술적 진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례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형 모방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도입한 무기의 많은 부분이 중국 모델에 기반하거나 기술적 모방의 성격이 강하다. 모방의 성격을 크게 구분하면, 첫째, 핵무기 고도화 구상과 개발의 전략적 경로 측면이다. <그림 I-1> 중국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로드맵을 보면, 중국은 크게 전략핵무기 개발시대에서 전술핵무기 개발 시대로 양분해 볼 수 있는데, 북한 역시 거칠게 구분하면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 주로 ICBM 사거리 확보, SLBM 개발에 주력한 바 있다. 2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에는 전략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중국이 ICBM → SLBM → 인공위성 → 전술핵 등 순서로 개발한 것과 유사하게 북한 역시 유사 경로를 답습하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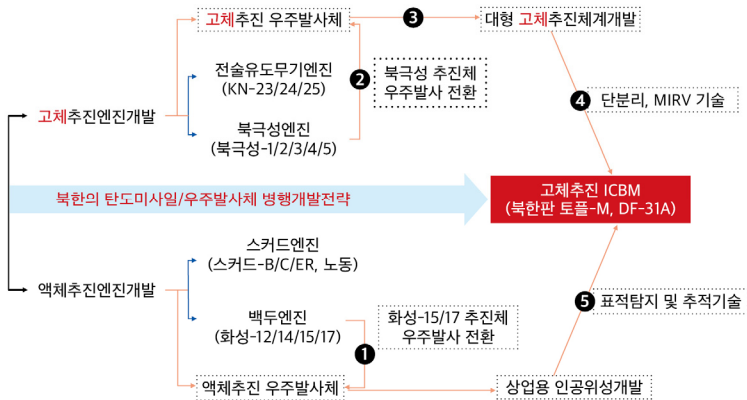
그림 1-1 중국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로드맵



출처: 이상민, “북한의 전략도발 전망 및 대응,” 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 연속기획시리즈(핵정
치와 군비경쟁, 기로에 선 한반도) 발표문 (2022.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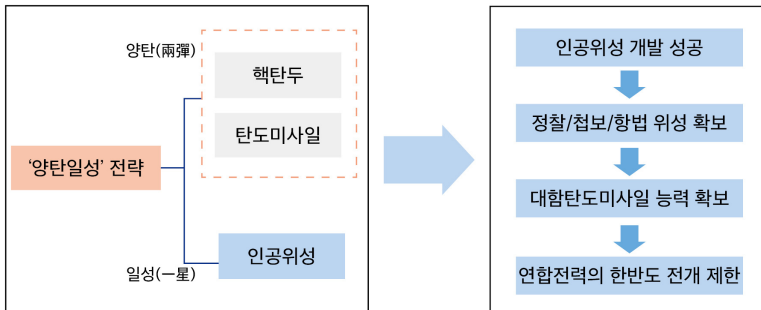
이런 경로 유사 모방은 세부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개발 로드맵을 보면 보다 확연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상민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개발하는 정황으로 볼 때, 우주발사용 대형 액체연료엔진 개발, 우주발사용 대형 고체연료엔진 개발, ICBM용 고체연료엔진 전환, ICBM용 다탄두 기술 전환, 위성기반 원격탐지 추적 기술 확보 등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완성을 위한 우회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개발 동향은 과거 중국이 1960~1980년대 ‘양탄일성’을 완성해 가던 시기의 개발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실제 이런 전략무기의 완성을 북한은 ‘전략국가’와 동일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2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로드맵



출처: 이상민,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세종정책브리프』 2022-05호 (2022), p. 8.

그림 1-3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로드맵



출처: 필자 작성.

따라서 북한의 전략국가론을 핵무기 고도화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핵미사일(전략무기/전술무기) 개발 구상, 경로, 실제 과정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 기술시스템 이론 차원

핵무기 고도화는 대부분의 핵무기 개발 국가에서 발견되듯, 표면
에 드러나는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과 기술적 성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과 변수로 가득 차 있는 불확실한 과
정의 연속, 다기한 기술적 응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부의
핵무기 개발 의지와 전략 구상, 개발 시스템의 구축, 가용자원의 동
원과 집약, 기술적 난관의 돌파, 지역 및 국제정세의 흐름과 저항,
대미 협상 여건의 변화, 정치적·법적 프로세스, 기술적 타이밍 설
정, 핵 프로파간다 등 다양한 요인과 변수들의 복잡한 함수관계 속
에서 이뤄진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하나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로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이론
을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를 기술사 차원에서 연구했던 토마
스 휴즈(Thomas Hughes)가 제시한 이 이론은 우리가 보통 특정 기
술시스템을 기술로만 인식하는 것에 반대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포
괄적인 인식을 제안한다. 기술시스템은 물리적 인공물뿐만 아니라
조직, 기반, 법적 장치, 자연자원 등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크게 보면 ‘기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결합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시스템은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으로 불리기도 한다.^{13/}

이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술시스템이 진화 혹은 발전한다는
점이다. 휴즈는 기술시스템이 네 단계를 거쳐 진화내 간다고 보았는

13/ 송성수, “에디슨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술시스템론,” 이상욱 외,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자들 ‘기술’을 성찰하다』 (서울: 동아시아, 2009), p. 122;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75 재인용.

데, 첫 번째 단계는 기술시스템의 탄생 및 성장단계(발명, 개발, 혁신), 두 번째 단계는 한 지역에 성공적이었던 기술시스템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술이전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서로 다른 기술시스템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며 성장하는 단계, 네 번째는 경쟁에서 승리한 기술시스템이 모멘텀(momentum)을 획득하며 공고화(consolidation)되는 단계다. 특히 경쟁단계에서는 결정적인 난제들에 해당하는 ‘역돌출부(reverse salient)’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14/}

휴즈는 기술시스템의 진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시스템 구축가(system builder)’라고 명명한다. 시스템 구축가는 “수많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기술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주변 환경에 있는 요소들을 기술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로 본다.^{15/} 이와 같이 기술시스템은 이론은 국지적 단위에서의 혁신적 행위가 어떻게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의 구체화된 시스템으로 확대·발전·공고화되고 표준화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16/}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 역시 하나의 시스템 건설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하나의 일관된 전략적 의도와 매끄러운 과정으로만 보기 힘들다. 실제로는 기술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법적, 사회적 차원의 다기한 과정이 혼재돼 있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에 직면해 임기응변과 전술적 대응, 실패와 변경, 수정과 우회 등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과정들이다.

14/ 홍 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pp. 76~77.

15/ 송성수·김범성·최진아, “과학기술문화활동의 진화와 특징에 관한 국제비교: 시스템 접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4-05 (2004), p. 42, p. 30.

16/ 홍 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p. 78.

다시 말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과정들의 실제들(realities)을 발견할 수 있다. 일종의 단선적인 하나의 ‘고도화 과정’이 아니라 기술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법적,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돌출과 저항, 전술적 좌절과 우회로의 설정, 기술적 도약과 딜레마 등 다양한 갈래가 복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을 본다는 것은 전략적 의도(목표), 개발 의지와 전략(추진체계), 실제 과정(실행), 문제와 난관(문제 인식), 전술적 대응(문제 해결), 시스템 공고화(지속성 확보) 등에 대한 다층적, 입체적, 체계적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 과정의 실제들을 보면, 단선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의 축적보다는 다층적인 문제화 양상,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혼재, 연속과 불연속, 단절과 역진, 우회와 퇴행 등이 반복되는 과정을 발견하게 된다.

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번역의 정치’

북한의 핵실험이나 무기 실험 때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왔다. 북한 무기의 위협 수준과 전략적·전술적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출돼 왔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로 억지용, 협상용, 국내정치용 등의 해석과 핵무기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정세, 한국과 미국 확장억제력 강화, 한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및 핵무장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에서 정세 긴장과 위기의 원인으로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의지와 호전적 도발 행태다.

사실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위기의 원인을 ‘북핵’ 문제로 환원하여 보는 방식은 1990년대 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반

도 ‘문제화’의 핵심적 인식 틀이 돼왔다. 역으로 ‘핵무기’를 통해 자신의 체제 생존과 실존적 위협을 항변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북한의 ‘번역(translation)’ 전략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문제화’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17/} 이제 누구도 북한의 ‘핵무기’를 경유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에 쉽게 접근하기 힘들도록 ‘번역’되어 버린 것이다.^{18/} 여기서 ‘번역’은 다양한 요인의 복잡한 네트워킹과 과정을 하나의 매끄러운 상식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은 곧 상식이자 기준이고 현상과 사물을 보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는 한반도 문제의 ‘의무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이 된 것이다. 한반도 관련 각 행위자들의 목표는 다르지만 이들 모두 북한의 ‘핵무기’를 경유하여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를 풀어야만 되는 것처럼 이 번역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19/}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를 북한의 핵문제로 단순화시키고 상식화한 구성과정을 다시 펼쳐 보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위기의 원인, 그리고 북한의 생존전략이 ‘핵무기’로 문제화돼 인식되기까지의 행위 구성(composition)과 접힘(folding) 과정을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구성과 접힘이라는 일련의 과정과 일화들이 어떤 행위자들의 힘겨루기(trial of strength)와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여러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하고 힘을 겨루고 속성을 교환하고 결합함으로써 구축되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크(socio-technical networks)를 살펴보는 것이

17/ 홍 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p. 283~316.

18/ 위의 글.

19/ 위의 글, p. 284.

다.^{20/}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전략국가론’은 일종의 북한식 번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략국가라는 프레임을 통해 핵보유국가로서의 위상, 대미 억제력 확보, 관계 개선 등으로 북핵 문제를 번역하고자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란 용어를 통해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협 받고 있으며, 체제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을 북한의 비정상성으로 설명하고 소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북한에서 핵무기가 체제 생존과 발전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번역 전략을 통해 수행해 나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 위의 글, p. 284.

Ⅱ. 전략국가론의 개념과 내용 변화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전략국가론의 개념과 내용 변화

1. 전략국가의 개념과 용법 변화

가. 전략국가 최초 개념과 용법: 미국 본토 핵위협 국가

북한 매체에 ‘전략국가’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2월 22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다. 전날인 12월 21일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최사의 하이라이트를 보도하면서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 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이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21/}

이 당시 ‘전략국가’의 의미는 미국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가 명확했다. 위의 전략국가 용어 첫 등장에서 설명한 의미는 한 달여 전인 2017년 11월 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알리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미국 본토를

21/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개최사를 하시었다,” 『노동신문』, 2017.12.22.

핵무기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전략국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전략국가’는 등장 당시 ‘미국에 대한 핵위협 능력’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용어의 첫 사용이 김정은의 연설이란 점이다. 북한체제에서 특정 메시지의 발화 층위는 고도로 조정되고 위계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메시지를 누가 말하느냐가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위계화된 발화자들의 층위 속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다. 지도자의 연설은 메시지 발화 층위의 최상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전략국가’가 고도로 준비된, 특정 목적에 맞게 고안된 용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공식 메시지 발신의 발화 층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지도자의 연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정세와 상황을 정의하거나 향후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용어의 등장이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지도자의 연설이다. 두 번째로 당 회의체를 통한 결정 채택, 주요 사안 결정에서 등장하는 메시지나 용어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당의 결정 형식을 빌리기 때문에 메시지와 용어에 무게감이 실린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노동신문』 사설과 정론, 기관 및 개인 명의 담화 등은 지도자의 연설, 당의 결정을 받아 그것의 의미와 실천을 대내외 청중을 상대로 강변하고 독려하는 방식이다. 이때 지도자가 제시한 새로운 용어에 대한 좀 더 풍부한 해설들이 등장한다. 네 번째가 『노동신문』 일반보도와 논평에서는 이 용어가 당조직 및 현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보도한다. 이 경우는 일상 수준에서 당의 정책과 지도자의 과업을 환기하는 수준에 그친다. 마지막은 대외선전매체다. 주민들이 볼 수 없으며 북한 당국이 대남, 대미, 국제사회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매체들 역시 지도자, 당 결정, 『노동신문』 사설 등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해설적 메시지들을

발신한다. 주로 대남, 대미 관련 매우 구체적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위계화된 발화 층위의 최상층에 속하는 지도자의 연설, 즉 ‘말’을 통해 등장했다는 점, 이후 『노동신문』의 사설, 정론 등 비중 있는 지면을 통해 용어의 역사적 의미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이 용어가 철저하게 특정 사안, 타이밍, 목적에 맞게 고안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12월 22일 첫 등장부터 2018년 초까지 ‘전략국가’라는 용어의 사용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사용의 증가 역시 이 용어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획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전략국가’의 사용 맥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물어가는 2017년 기슭에서 세계는 새로운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공화국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있다.”^{22/}

“트럼프패거리들은 저들이 군사적 힘을 적용해보려는 상대가 미국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강력한 실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23/}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24/}

“미본토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조선의 실체를 미국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25/}

22/ “(논평) 강대한 조선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선중앙통신사』, 2017.12.15.

23/ “대조선군사적 공격은 곧 자멸의 길이다,” 『노동신문』, 2017.12.31.

24/ “신년사,” 『노동신문』, 2018.1.1.

25/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철회하라,” 『노동신문』, 2018.1.2.

이 시기 ‘전략국가’ 사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로 미국 본토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강조하는 부분, 둘째로 새롭게 ‘급부상한 실체’에 대한 인정 요구다. 이 당시 전략국가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가능한 ICBM의 성공을 근거로 한다. ‘전략’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전략무기(strategic weapon)’로 통칭하는 일반의 용례에 그것을 보유한 ‘국가’라는 주체를 결합시킨 조어라고 보여진다.^{26/}

그렇다면 기존의 ‘핵보유국’과는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핵보유국’이란 용어는 북한이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그해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핵보유국’은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핵실험을 통해 핵폭발 능력을 입증한 국가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전략국가’는 핵실험의 폭발력 증가뿐만 아니라 그것의 투발수단으로서 ICBM을 보유하여 미국에게 ‘실제적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핵능력은 있되 미국에게 실제적 핵위협을 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면, 전략국가는 실제적 핵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북한 지도부의 의도 중 한가지는 북한의 핵능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지점에서 그것을 국가 위상 차원에서 과시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점이다.

이후 전략국가의 용법은 의미 부여 차원에서 보다 풍부해진다. 우선 북미 사이의 힘의 구도 변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됐다. 기존 북미 대결구도가 ‘비핵국가 대 핵보유국’였다면 이제 ‘핵보유국가 대 핵보유국’의 구도가 되었다는 것이다.^{27/} 전략국가는 바뀐 구도를

26/ 전략무기는 통상 상대 국가에 대량파괴를 안겨 줄 수 있는 사정거리 5,500km급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일컫는다.

27/ “자주와 병진, 일심단결과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갈 것이다,” 『노동신문』,

보여주는 하나의 자기규정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략국가로서의 책임의 강조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닌 책임있는 전략국가”임을 강조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 위험을 억제하는 책임적 역할 등을 언급한다.^{28/} 대미억제를 넘어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책임’까지 전략국가에 부여한 것이다. 셋째, 미국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용법이다. 전략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29/}

나. 전략국가 용법 변화1: 정세전환기 김정은 정치력 과시 용법

이런 일련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전략국가의 용법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18년 4월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전략국가 용어 사용에서 ‘핵보유’, ‘핵위협’이나 ‘미국’, ‘미국의 정책 전환’ 등이 사라진다. 대신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급부상”,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와 같은 평범한 지위 묘사에 그치거나 김정은의 정치적 성과와 정치능력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변화한다. 김정은의 정치력으로 전략국가가 되었고 북미 대화국면이 만들어졌다는 치적용 용어로 변화된 것이다. 대체로 정세 흐름을 주도하는 김정은 치적 과시,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낸 동력을 ‘전략국가’에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이런 용법 변화는 2018년 7월까지 유지된다.

“최고영도자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출중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정세 흐름을 주도하시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

2018.1.24.

28/ “주체조선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적 입장,” 『노동신문』, 2018.1.8.

29/ “대조선정책전환이 유일한 출로이다,” 『노동신문』, 2018.2.6.

건히 수호해 나가고 계신다. 현 조미대화국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와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30/}

“주체조선을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높이 올려세우시고 세계가 경탄하는 무비의 담력과 영활무쌍한 외교전으로 미국과의 세기적인 회담장에서 조국과 민족,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31/}

다. 전략국가 용법변화2: 미국의 대외정책 입장 변화 요구

다시 한번 ‘전략국가’ 용법에서 미묘한 변화가 발견된 지점은 2018년 8월부터다. 이 시기부터는 ‘전략국가’ 용어 사용 빈도가 이미 현격하게 줄어든 상태이다. 내용적으로는 김정은 치적 과시가 사라지고 미국에게 대외정책 입장을 제대로 취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에서 전략국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조선반도문제를 대하는 데서 관건은 세계적인 전략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대외정책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다”^{32/}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잘 진행될 듯 보였던 북미 협상이 7월 들어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의 방북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교착국면으로 접어든 시기와 맞물려 정확히 ‘전략국가’의 용법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실제적 핵위협이나 핵보유 의미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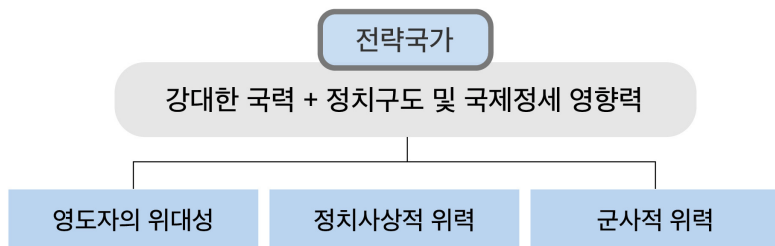
30/ “민족자주의 길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 『노동신문』, 2018.5.22.

31/ “21세기 위대한 태양이시며 총련가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노동신문』, 2018.6.15.

32/ “언제까지 평화 간판으로 세계를 기만하려는가,” 『노동신문』, 2018.8.14.

국가의 지위를 똑바로 볼 것을 요구하는 강경함이 묻어나기 시작한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전략국가’ 사용빈도를 급격히 줄이지만 용법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견지한다.

그림 II-1 북한의 전략국가 개념도



출처: 변정범, “전략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근본요인,” 『철학연구』, 제3호 (2018), pp. 16~17 참고하여 필자 작성.

2018년 출간된 북한의 『철학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전략국가’의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이 논문에서 ‘전략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강대한 국력을 갖추고 세계정치구도 변화와 국제정세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는 나라”로 정의했다.^{33/} 이런 전략국가의 지위는 “해당 나라의 종합적 국력에 의하여 규정되며 여기에서 기본은 정치군사적 위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종합적 국력은 무엇으로 구성되며 결정되는 것일까. 북한은 전략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영도자의 위대성’을 꼽는다. 이것은 북한식 선 전체제의 전형적 어법이다. 나머지 요인은 ‘강대한 군사력’,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을 제시한다. 군사적 위력은 “정치사상적 위력과 함께 전략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요인의 하나”이다. “무진막강

33/ 변정범, “전략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근본요인,” 『철학연구』, 제3호 (2018), pp. 16~17.

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한 군사적 위력이 없이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세계정치구도 변화와 국제정세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는 전략국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전쟁억제력’이 전략국가의 핵심 근간인 것이다. 전쟁억제력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전략국가는 북한의 기대와 욕구를 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데, 세계정치구도, 국제정세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 즉 북한의 입장에서 최소한 전략적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국가, 최대치는 현상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전략국가 용법변화3: 적대세력의 비난과 국방건설사업 총력전

‘전략국가’와 관련 또 한 번의 용법 변화는 2019년 4월 이후 나타난다.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부터다. 이 시기부터는 전략적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적대세력의 비열하고 악랄한 제재책동”,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는 제국주의 행태”, “제국주의 침략의 불구름”, “전진을 막는 집요한 책동” 등 대미 공세를 함께 전개하기 시작한다.^{34/}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여파에 따라 ‘전략국가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태도에 대한 비난을 함께 연계시키는 시기라

34/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노동신문』, 2019.4.13;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적기에 끝내자,” 『노동신문』, 2019.9.16; “우리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다,” 『노동신문』, 2019.11.1;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고 우리 혁명을 보위하자,” 『노동신문』, 2019.11.12.

고 할 수 있다.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전략국가 또는 전략적 지위에 입각하여 ‘정면돌파전’, ‘대국적 자세에서 외교전, 책략전을 배심있게 전개’,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 ‘국방건설사업에서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 등을 내세우며 전략국가의 지위는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용법이 변화된다.^{35/}

그림 II-2 북한의 전략국가 용법 변화 추이

[최초용법] 2017. 12 ~ 2018. 3

-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적 핵위협 가능국가
- 북미, 핵보유국 vs 핵보유국 구도 변화
- 세계 평화, 안전의 중대 사명 가진 책임있는 전략국가
- 미국의 정책전환 요구

[용법변화1] 2018. 4 ~ 2018. 7

-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 확보
- ‘핵위협’, ‘핵보유’, ‘미국 정책전환’ 등 사라짐
- 김정은 정치적 성과와 정치능력으로 달성한 전략국가

[용법변화2] 2018. 8 ~ 2019. 3

- 전략국가 지위에 맞게 미국의 대외정책 입장 변화 요구
- 전략국가 개념 체계적 정의 시도
- 전략국가 구성요인: 영도자 위대성, 정치사상적 위력, 군사적 위력

[최초용법3] 2019. 4 ~ 2019. 12

- 전략적 지위 최상의 경지
- 적대세력의 제재책동, 제국주의 형태 비난
- 미국 비난과 연계

[최초용법4] 2020. 1 ~ 현재

- 정면돌파전, 배심 있는 외교전, 책략전
- 전략국가 지위에 맞는 국방건설사업 총력전

출처: 필자 작성.

^{35/} “(사설) 당창건 75돐을 맞는 올해에 정면돌파전으로 혁명적 대진군의 보복을 크게 내짚자,” 『노동신문』, 2020.1.3; “(사설) 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2020.3.2.

정리하면, 전략국가 용어는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용법이 변화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용어는 국가핵무력 완성부터 시작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북미협상 결렬, 대미 장기전 및 정면돌파전 등으로 이어지는 2017년부터 현재의 정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정세 변화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용법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면, 북한이 이 용어에 투영하고 있는 전략적 의도, 지도부의 기대, 전술적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사용빈도의 변화 추이와 사용의 정세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이 용어 사용의 전략적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 보고자 한다.

2. 전략국가 사용 빈도와 사용 배경

가. 김정은 시대 전략용어와 ‘국가’ 관련 용어

‘전략국가’라는 용어의 사용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외 통치 차원에서 사용한 주요 ‘국가’ 관련 용어를 식별하고 등장 배경과 사용 맥락을 전략적·정책적 함의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략·정책용어’는 대내 통치와 대외정책의 전략적 방향과 기초,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담론과 그것을 함축하는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다.^{36/} 특히 ‘국가’의 위상과 지위를 상징하는 용어들은 대내외에 조성된 정세와 향후 전략을 함축하는 전략·정책용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기간 사용해 온 주요 ‘전략·정책용어’를 식별하여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조성된 대내외 정세에 따라 용어 사용에 있어 뚜렷한 변화를 감지해 낼 수 있다.

36/ 홍 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p. 1.

첫째, 전략적·정책적 용어 사용의 전체적인 변곡점은 제7차 당대회와 2018년 북미 및 남북 대화, 2021년 제8차 당대회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2012~2015) 다양한 전략적·정책적 강조 용어들이 등장했으나,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기존 용어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대체로 간소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2012~2015년 시기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백두’ 등과 같이 집권 초기 선대와의 계승성, 정통성을 강조하고 상징하는 용어들의 사용이 많았으나, 제7차 당대회 이후 ‘전략적 노선’이란 이름 하에 김정은만의 통치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전략·정책용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37/}

특히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부터 2018년 4월까지 남북 및 북미 대화 기조의 정세 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핵보유국’이나 핵능력을 과시하는 용어가 대거 등장하고 강조됐다. 2018년 4월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핵무력을 직접적으로 과시하는 용어는 사라지고 주로 경제발전이나 국가의 전략적 위상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주로 사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는 핵무기 고도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표 II-1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별 전략·정책용어 강조 내용

시기	2012~2015	2016~2018.4	2018.4~2020	2021~현재
용어 특징	• 선대 계승성 강조	• 김정은 통치상징 • 전략적 노선 • 핵보유, 핵능력 과시	• 경제발전 • 전략적 위상	• 핵무기 고도화 • 자력갱생

출처: 필자 작성.

37/ 위의 책, p. 1.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7년부터 국가의 전략적 위상을 강조하는 단어들의 전략정책용어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주요 변화 기점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기점을 통해 북한 주요 매체들에서 핵보유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달라졌다는 표현이 급증했다. 이런 흐름에도 확연한 변화가 발견된다.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 전후로는 주로 핵무기 개발의 속도와 위력,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용법에 주력했다면,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핵보유’라는 직접적 표현은 사라지고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지위’, ‘국력’의 변화를 표현하는 포괄적 의미의 전략·정책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북미 및 남북 대화와 협상을 의식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017년까지 핵능력 과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태도에서 이후 핵무기를 통해 높아진 국가 위상을 드러내는 쪽으로 용법을 뚜렷하게 변화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38/}

둘째, 과거 인격적 국가 호명에서 국가성을 그 자체를 강조하는 국가주의 용어가 강조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2~2015년까지는 주로 김일성·김정일조선, 김일성민족, 김정일 조선 등과 같이 선대 지도자의 인격성에 의존하는 국가 호명이나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강성국가’와 ‘선군조선’과 같은 용어들이 주를 이뤘다.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는 ‘백두산대국’이 유일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점차 ‘지식경제강국’, ‘강국’, ‘주체조선’ 등 국가성 자체를 강조하는 용어를 선호하기 시작한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 국가의 강대성을 표현하는 용어와 서사구조를 강화하였고,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기점으로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 등장한 이후 ‘국가’ 용어를 전면화하면서

38/ 홍 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p. 2.

‘민족’이 들어간 용어의 빈도를 줄이고 ‘국가’ 사용을 대폭 늘리기 시작한다.^{39/}

특히 ‘우리국가제일주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전략국가’ 용어와 함께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다.^{40/} 정리하면, 현재까지 전개된 김정은 시대는 ‘민족’보다는 ‘국가’, 인격적 호명 국가보다는 ‘국가성’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2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별 ‘국가’ 관련 전략·정책용어 강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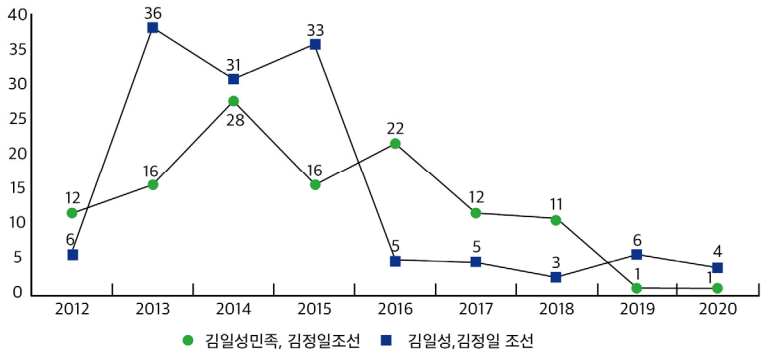
시기	2012~ 2015	2016~ 2017.10	2017.11~ 2018.4	2018.4~ 2020	2021~ 현재
용어 특징	• 인격적 국가 호명 •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 • 강성국가, 선군조선 • 백두산대국 • 사회주의 문명국	• 국가성 자체 강조 • 강국, 주체 조선 • 지식경제 강국 • 청년강국	• 국가 지위와 위상 • 핵보유국가 • 전략국가 • 우리국가 제일주의	• 국자 지위와 경제 • 청년강국 • 우리국가 제일주의	• 핵강국 지위 • 주체의 핵강국 • 강성국가 • 우리국가 제일주의

출처: 필자 작성.

39/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노동신문』, 2017.11.30. 이 사설을 통해 핵무력 완성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더 높아졌으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국가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역역히 아로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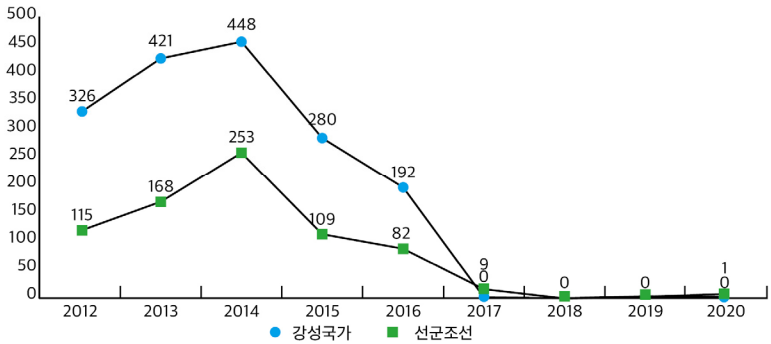
40/ 이지순, 『(KINU Insight)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2.

그림 II-3 『노동신문』 사설 등장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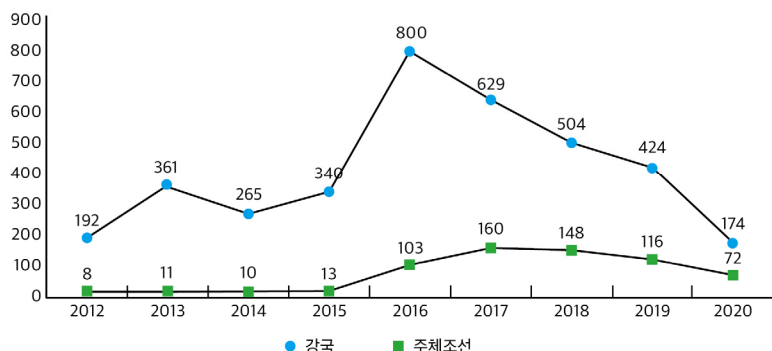
출처: 박소혜,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사설,” 홍 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p. 21.

그림 II-4 『노동신문』 사설 등장 ‘강성국가’, ‘선군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출처: 박소혜,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사설,” 홍 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p. 28.

그림 II-5 『노동신문』 사설 등장 ‘강국’, ‘주체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출처: 박소혜,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사설” 홍 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p. 31.

셋째, ‘핵’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과 관련 파생어 사용의 추이에서 현격한 변화가 발견된다. 큰 흐름으로 보면, 2016~2018년 초까지 핵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핵’과 관련 용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비핵화 담론으로 사용 맥락이 축소되었다가 2020년 이후 다시 핵무력 고도화 담론이 재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핵’ 관련 용어는 전체 전략·정책용어 중 사용 빈도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용어로, 이 용어가 대외적으로 갖는 파급력을 고려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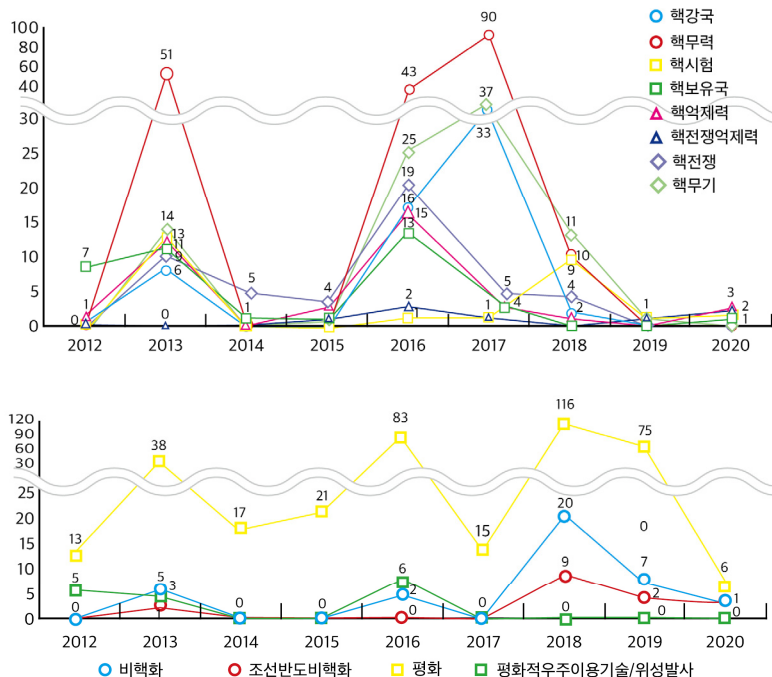
파생어 확대 다변화에서도 ‘핵’ 관련 용어가 가장 활발했는데, ‘핵 강국’, ‘군사대국’, ‘핵대국’, ‘핵무력 고도화’, ‘핵공격무력’, ‘핵억제력’, ‘자위적 국방력’, ‘핵운반수단’, ‘초강력열핵무기’, ‘핵타격사정권’, ‘전략무기’, ‘전략군’, ‘국가핵무력’, ‘전쟁억제력’ 등이 있다.^{42/} 2019년 이후 ‘핵’ 관련 용법은 ‘평화’ 용어와 수사적 관계를 맺으며

41/ 홍 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42/ 위의 책, p. 3.

의미화하는 것을 강화, 소위 핵무기 고도화가 평화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담론을 강화하고 있다. 핵무기 지속 개발과 장기적 보유 의사를 ‘평화’ 담론과 결부하여 정당화하는 기조가 2020년 이후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43/} 관련하여 ‘민족’, ‘평화’, ‘화해’, ‘통일’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들은 2019년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민족끼리』나 『노동신문』에서 크게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4/}

그림 11-6 『노동신문』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 중 핵과 평화 관련 용어 빈도와 추이



주: 1) '비핵화'의 언급 횟수는 '조선반도비핵화'의 언급 횟수를 포함

2) '평화'의 언급 횟수는 '평화적우주이용기술/위성발사'의 언급 횟수를 포함

출처: 권주현,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공개활동』 홍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p. 31.

43/ 위의 책, p. 3.

44/ 위의 책, p. 3.

넷째, 적극적인 외향적 정책 비전에서 내부 결속 중심의 전략·정책용어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45/} 초기 특정 정책 비전을 담은 ‘강국’ 표현에서 2019년 이후 내핍 극복과 인내를 요구하는 ‘자력’ 구호와 담론으로의 변화다.^{46/} 집권 초기 강조했던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 체육강국, 백두산대국 등 국가운영의 포부가 담긴 정책 비전 용어가 급격히 줄고 2019년 이후 ‘자력’ 관련 용어들이 강조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47/} 2017년 전까지는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서 대외적 압박을 내부적으로 견뎌내는 차원에서 ‘자력’ 관련 용어가 강조되다 2019년 이후 북미협상 교착, 향후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내부결속과 내부 자원 동원 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8/} 2020년에는 ‘정면돌파전’, 2021년에는 ‘자력갱생전략’ 등 보다 높은 수위에서 ‘자력’ 담론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 중심 통치체제의 정비와 당대회를 기점으로 한 전략·정책용어 증가 현상이 발견된다.^{49/} 김정은 시대의 전략·정책용어는 대체로 당대회를 기점으로 증가하여 다양하게 파생 활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50/} 집권 초기에는 선대 지도자들과의 계승성에 비중을 두었다면,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본격 제시, 제8차 당대회는 조성된 대내외 정세의 어려움에 응전하는 전략·정책용어 생성에 주력했다.^{51/}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했던 전략·정책용어의 대부분은 2017~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대회 기점으로 쏟아낸 용어들이 파급효과

45/ 위의 글, p. 104.

46/ 위의 글, p. 104.

47/ 위의 글, p. 104.

48/ 위의 글, p. 104.

49/ 위의 글, pp. 105~106.

50/ 위의 글, pp. 105~106.

51/ 위의 글, pp. 105~106.

와 정세를 반영하여 정리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52/} 전략·정책용어들은 당대회를 기점으로 일군의 전략·정책용어군으로 형성되었다가 특정 몇 개의 용어로 정리·수렴되었으며, 2021년 제8차 당대회 전후 전략·정책용어군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3/} 이런 경향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비전들이 조성된 정세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조정되면서 통치상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용어 중심으로 정리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54/}

정리하면, 이런 용어의 의미 변화가 정책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일정한 시계열적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당대회가 주요 전략·정책 용어 사용의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당대회를 기점으로 5년 간의 전략적 기조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후 일정 기간 사용되면서 용법이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1~3년 집중적으로 쓰이다 자연스럽게 사용 빈도가 줄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당시 국면과 정세에 맞게 고안돼 등장한 용어가 정세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경우, 지향했던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용어도 사라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체로 전략적 기조와 정책 방향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5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자신들도 향후 불확실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전략국가 사용빈도 추이와 사용 맥락

북한에서 ‘전략적 지위’는 201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전략국가’는 2017년 1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6

52/ 위의 글, pp. 105~106.

53/ 위의 글, pp. 105~106.

54/ 위의 글, pp. 105~106.

년 전에도 ‘전략적 지위’란 용어는 아주 간헐적으로 사용됐다. 2012년 처음으로 『노동신문』에서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를 한 차례 사용했고 2013년에는 두 차례 사용했다. 이때 이 용어의 뜻은 2016년 이후와는 완전히 다르다. 특정 지역 세력이나 교육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됐다. 처음으로 핵보유와 연관된 의미를 갖고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당당한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대국들의 압력을 받는 지역이 아니라 열강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그 전략적 지위가 비할 바 없이 높아가고 있다”는 표현이다.^{55/}

표 II-3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 『노동신문』 등장 건수

연도	합계	전략국가	전략적지위	중복
2012	1		1	
2013	2		2	
2014	1		1	
2015	2		2	
2016	161		161	
2017	419	5	414	1
2018	201	133	81	13
2019	65	10	55	
2020	54	3	52	1
2021	47	3	45	1
2022	18	1	17	
합계	971	155	831	16

출처: 필자 작성.

그러나 매우 간헐적으로 미미하게 이 용어를 사용하다 사용 빈도가 증가한 시기는 2016년 5월이다.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점차 늘

^{55/} “조선반도는 대국들의 각축전 마당이 아니다,” 『노동신문』, 2014.9.21.

어나다 그해 9월 제5차 핵실험, 다음 해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이후 사용이 급증한다. 일정한 정치외교적 차원의 전략·정책용어로 개념화를 염두에 둔 사용은 201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전략적 지위’란 용어는 2016년 5월 이후 사용을 본격화해 2018년 4월까지 비약적으로 사용이 증가한 용어다.

‘전략국가’란 용어는 2017년 12월 22일 처음 『노동신문』에 등장했다. 한달여 전인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 성공 직후 등장한 것이다. 이때 함께 등장한 것이 ‘우리국가제일주의’다. 같은 날 사설에서 동시 등장했다. 두 용어 모두 핵무력 완성 직후 준비된 듯 등장했고 각각 핵보유국의 위상과 내부적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보인다. ‘전략국가’는 2018년 초까지 사용이 폭증하다 2019년 이후 10분의 1 가량 대폭 감소했다. 2020~2022년 현재 간헐적으로 『노동신문』 사설이나 정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등장하고 있다.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 모두 2016~2017년 사용에 있어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노동신문』 사설이나 정론, 중요 기념행사 보고나 연설에서 무게감 있게 사용되고 있다.

표 II-4 '전략국가' 및 '전략적 지위' 『노동신문』 월별 건수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2			1										1
2013										2			2
2014									1				1
2015	1				1								2
2016					6	12	23	9	49	27	18	17	161
2017	23	17	22	20	17	10	62	67	60	32	21	68	419
2018	54	38	13	22	16	8	10	30	4	2	1	3	201
2019	8	7	6	5	4	7	5	6	6	2	4	5	65
2020	6	10	2	6	3	7	6	4	6	4			54
2021	4	4	1	5	2	2	2		7	6	4	10	47
2022	3	1	4	9	1								18
합계	99	77	49	67	50	46	108	116	133	75	48	103	971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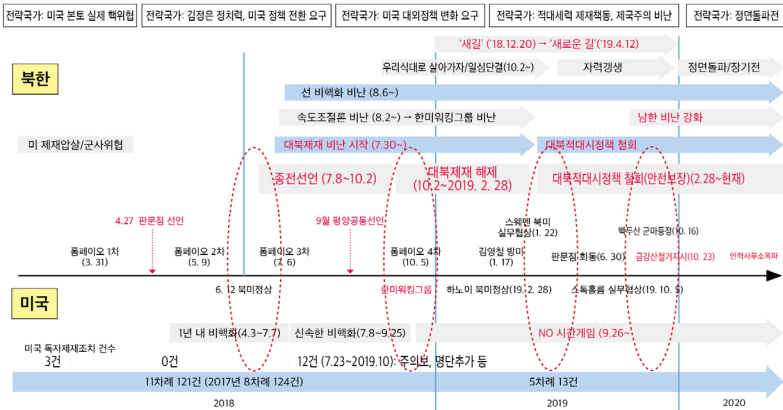
 핵실험
 당대회
 핵무력완성선언
 북미·남북 대화

그렇다면 왜 특정 시기에 ‘전략’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가’나 ‘지위’ 표현을 하려고 한 것일까. 핵무기 고도화의 기술적 진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북한은 ‘전략’이 들어간 용어들의 사용을 크게 늘린다. 전략군, 전략탄도로켓, 전략적 구도, 전략적 억제력, 전략무력, 전략공격무기, 전략잠수함, 전략적 경쟁자, 전략적 노선, 전략적 과업, 전략적 자원 등이다. 전체적으로 사용한 용례를 보면, ‘전략’의 의미에 ‘무기’ 또는 ‘군사’ 차원의 의미가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내 언론을 통해 ‘전략 무기’, ‘전략자산’ 등의 용어가 전에 없이 많이 사용하던 시기와의 겹친다. 대체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다.

추론하면,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는 핵무기 고도화와 미국 전략 자산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국면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압도적 무기체계인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응하는 수사적 용어로 ‘전략-’ 관련 용어들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전략국가나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 역시 ‘전략자산’이나 ‘전략무기’의 대응 용어, 그것을 북한식으로 전유(appropriation)하여 국가 위상 자체를 전략적 무기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들은 시기적으로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의 특정 단계에서 등장했다. ‘전략적 지위’의 경우,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5, 6차) 직후 등장하여 본격 사용됐다. ‘전략국가’는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직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두 용어 모두 핵무기의 기술적 진화를 통해 달라진 국가의 위상을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대미협상을 위한 대외적 용어의 성격이다. 2018년 북미협상이 전개되던 시기에 사용 빈도가 급증했던 점,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며 거기에 걸맞는 대우와 협상 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도자의 핵무기 성과를 내부적으로 알리기 위한 용도다.

그림 II-7 전략국가 용어 사용 배경과 북미 주요 정세 대응



출처: 필자 작성.

결론적으로 전략국가 용어의 용법 변화와 사용빈도 변화는 2017~2022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II-7>에서 보듯, 북미 협상 전개 전까지 전략국가는 미국 본토에 실제적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쓰였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용법은 김정은의 정치력을 과시하거나 세계적으로 공인된 전략국가라는 포괄적 의미로 극적 변화한다. 2018년 7월 기점으로 북미협상이 교착에 들어가면서 전략국가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었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적대세력에 대한 비난에 초점을 맞춰 전략국가 용어를 사용한다. 결국 북한의 공식 메시지 차원에서 전략국가 용법 변화는 북미 협상의 굴곡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다.

3. 전략국가의 의미체계와 메시지

위 절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란 용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와 맥락, 목적 지향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크게 ① 북미 대등함의 확보, ② 대미 억제력의 확보, ③ 북미 공존적 관계 개선이다. 모두 미국을 주요 청자로 한 의미체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의미체계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 용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첫째, 대등함의 확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장을 쫓아가면, 소위 기존의 북미 사이의 비대칭성을 수정하여 일정한 대칭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성은 핵보유국의 비대칭성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가이고 북한은 비핵보유국가라는 현격한 군사적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북한은 미국이 압도적인 핵무기를 통해 일방적으로 북한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한다. 1957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첫 배치 이후 미국은 다량의 핵무기,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위협해 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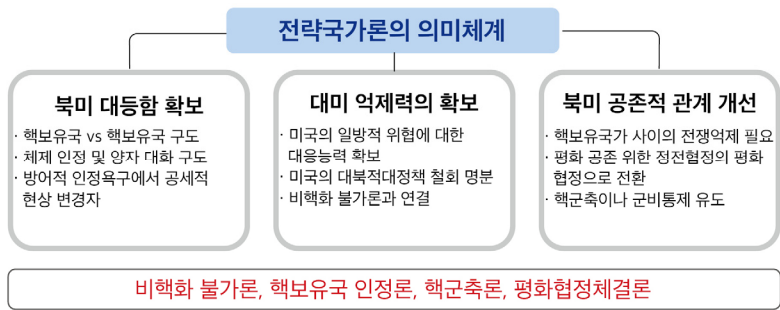
그러나 2016년 제5차 핵실험과 2017년 제6차 핵실험, 화성-15형의 성공은 바로 이런 비대칭성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로 일방적 위협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주장을 강하게 환기시키기 위한 용어가 바로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인 것이다. 이 비대칭성, 대등함의 기준은 일차적으로 핵무기의 보유 여부다. 이 대등성은 표면적으로 핵보유국가라는 ‘동일성’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자 대화의 대상으로 북한을 대하지 않는 미국의 고압적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세적 우위 과시보다는 최소한의 인정과 대상을
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되었으니 자신들을 위협하기보다는 협상 대상으로서 관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이다. 소위 대화의 상대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측면이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후 이런 태도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핵무기 고도화를 천명하면서 2017년
당시 방어적인 인정욕구로서의 ‘전략국가’ 주장이 국제 및 지역 정세
의 안정자, 세계적 전략 변화를 추동하는 영향력과 같이 적극적인
위상 변화 차원의 ‘전략국가’로 변화된 것이다. 실질적인 핵무기 능
력 신장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략국
가’ 주장 속에는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여 미국과의 대등함을 확보
한다는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억제력 확보로서 ‘전략국가’ 의미다. 북한은 미국이 지금까
지 핵무기 배치와 위협적인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위협해 왔는데, 북한은 이를 억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핵실험과 ICBM의 완성은 대미
최소 억제력의 확보를 의미한다고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이제 막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사이의 격차는 크다. 북한은 그 격차가 좁혀져 대등해졌다는 의미보
다는 좁힐 수 없는 현격한 격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함부로 하지는 못하게 됐
다는 것을 알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전략국가의 현재적
의미 역시 바로 대미 억제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최근의 비핵화 불가론으로 이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8 북한 전략국가론의 의미체계



출처: 필자 작성.

셋째, 북미 간 공존적 관계 개선이다. 핵보유와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적 핵위협 능력을 통해 전략국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과거처럼 일방적 위협을 할 수 없고 자칫 핵보유국가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으니,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상호 평화롭게 공존 가능하도록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핵보유국가인 미국과 북한이 대등하게 평화적 공존을 위한 평화협정을 맺고 상호 위협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물론 상호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핵군축이나 군비통제의 주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주장은 비핵화는 불가하며 일정한 핵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북미간에 공존이 가능한 핵군축, 군비통제를 실시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란 용어는 미국과의 비대칭적 관계의 변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의 억제력 확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한 관계 개선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 전략적 지위가 2016년 처음 등장한 이후, 2107년 전략국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이 두 용어는 이런 세 가지 주장을 펼치기 위한 핵심 용어였다.

한마디로 적대적인 북미관계를 대등한 공존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다만 기저에는 비핵화 불가론, 핵보유국 인정론, 핵군축론, 관계개선론 등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들 사용 맥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전략적 지위’와 ‘전략국가’ 용어는 자기 만족적 규정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철저하게 미국을 청자로 한 용어라는 점이다. 미국에게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재고하도록 요구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 두 용어를 통해 주장하는 위의 모든 내용은 다 미국에게 하는 주장의 성격을 갖는다. 결국 이 두 용어는 미국에게 북한의 존재와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용어로 고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 용어가 등장하는 매체 담론에는 일본과 한국 역시 언급된다. 일본과 한국에게도 역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제대로 보라고 충고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한국의 위상은 현격하게 다르게 표현된다. 북한은 이제 핵을 보유하여 미국과 대등해졌고 전략적 위상이 달라졌으니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부추겨 대북적대정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핵무기로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는 궁극적으로 ‘현상변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변경의 내용은 핵보유국가 대 핵보유국가라는 북미 구도의 변경 인정, 대미 억제력과 실제적 핵위협 능력에 맞게 대북한 군사적 위협,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변경, 적대적인 북미관계를 공존 가능한 평화적 관계로의 변경 등이다. 일차적으로 2018~2019년 북미 정상간의 회담과 합의 구도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북한에겐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인정하는 ‘핵보유국가’는 요원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의 기정사실상화, 정치적 인정을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미 억제력 차

원에서도 전술핵 배치에 박차를 가하며 한층 실질적 위협 수준을 높여 한미의 군사적 태세와 대북적대정책에 대응하는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부터 시작한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완수 시점을 전후로 대미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핵군축 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북적대시정책 철회가 주요한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 주장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 용어들이 등장한 이후 거의 모든 시기에 대북적대정책에 대응한 전략국가론을 펼쳐왔다. 물론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은 이미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북한이 주장해 온 내용이지만, 전략국가론은 대북적대정책의 구체적 내용, 특히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근거해 실제적 위협 능력, 대미 억제력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국가와 전략적 지위 주장은 향후 대북적대정책 철회, 다시 말해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수사적 대응 용어로 더욱 의미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Ⅲ. 핵무기 기술시스템과 전략국가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핵무기 기술시스템과 전략국가론

1. 기술시스템 진화 과정으로 본 핵무기 고도화

북한의 전략국가론은 핵무기 고도화라는 하나의 기술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로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전략국가론의 등장과 체계화, 용법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정 은 집권 이후 핵무기 고도화의 기술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로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 냉전의 붕괴라는 세계 질서의 중대 변화에 직면해 있었고 기존 냉전체제에 의존하던 북한에게는 역사적 도전과 시련을 의미했다. 북한은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권의 지속성을 담보할 시스템의 핵심에 핵무기체계가 선택되었다. 탈냉전기 국제정세에 대응한 체제로 핵무기가 시스템 건설자(system builder) 또는 사회-기술적 체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략국가론은 이러한 기술시스템의 건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56/}

56/ 토머스 휴즈 지음, 김정미 옮김, 『테크놀로지, 창조와 욕망의 역사(Human-Built World)』 (서울: 플래넷미디어, 2008), p. 123.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을 토마스 휴즈(Thomas P. Hughes)의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 이론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시스템은 물리적 인공물, 조직, 과학지식, 법적 장치, 자연 자원 등으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목표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기술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들은 주변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시스템과 주변 환경은 정태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술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주변환경의 일부를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포섭하기도 하며 반대로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주변환경으로 해체되기도 한다. 휴즈는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기술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주변환경에 있는 요소들을 기술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주체를 시스템 구축가(system builder)로 규정했다.^{57/}

기술시스템은 몇 개의 단계를 걸쳐 진화하는데, 발명(invention), 개발(development), 혁신(innovation), 이전(transfer), 성장(growth), 경쟁(competition), 공고화(consolidation) 등으로 구분한다.^{58/} 핵무기 기술시스템은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해당 공간의 특성에 맞게 적응, 기존 사회·기술적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스템이 도입된 곳의 정치문화와 이념체계, 지정학적 조건, 법적 체계, 역사 등이 작용하면 ‘기술적 스타일(technological style)’이 달라질 수 있다.

57/ 위비 바이커 외 지음, 송성수 편저, 『과학 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전거, 형광등, 미사일, 전기자동차, 항공기의 일생을 통해서 본 현대 사회』 (서울: 새물결, 1999), p.10.

58/ Thomas P. Hughes, “The Evolution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 Wiebe E. Bijker, Thomas P. Hughes, and Trevor J.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 New Direction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ss: MIT Press, 1987), pp. 51~82.

가령 핵무기 기술시스템이 북한과 같은 정치체제와 정치문화로 이전되는 것과 다른 체제로 이전되는 경우 ‘기술적 스타일’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핵무기의 기술적 스타일은 핵무기의 어떤 요소와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는지, 핵무기를 운용하는 원리와 조직, 정치적·외교적 사용방식, 자원배분과의 연계방식 등과 연관된 것이다. 지정학적 조건 역시 핵무기 기술시스템의 구현 방식 - 제작·실험·실전화·배치·훈련·교리화 -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핵무기 개발 이전 국내적으로 정치적 논쟁, 법적 규제와 절차, 국민 여론, 막대한 재원의 마련 등의 과정을 경유하게 된다.^{59/}

기술시스템은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일종의 지연요소(drag), 잠재적 한계(limits to potential), 긴급한 문제(emergent friction), 시스템 효율(system efficiency) 등 개발 요인들 간의 불균형한 성장, 병목현상 등의 발생이다. 일명 역돌출부(reverse salients)라고 부른다.^{60/} 이 경우 역돌출부를 ‘결정적 문제(critical problems)’로 환원하고 물질·인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게 된다.^{61/} 또한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을 상대방보다 단축시키기 위해 항구적으로 공

59/ 홍 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 295.

60/ 돌출부는 통상적으로 기하학적 도형이나 최전방 전선, 혹은 기상에서의 전선 등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일컫는다. 역돌출부란 시스템 내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뒤쳐져 있거나 다른 요소들과 제대로 상호작용을 해내지 못하는 요소를 말한다. 역돌출부는 시스템 건설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 결정적 문제, 장애요인 등으로 볼 수 있다. 토마스 휴즈, “거대 기술 시스템의 진화,” 위비 바이커 외 지음, 송성수 편저, 『과학 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전거, 형광등, 미사일, 전자자동차, 항공기의 일생을 통해서 본 현대 사회』, p. 160.

61/ 가령 ‘스루트니크 쇼크’로 인해 서방은 무기 기술 면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을 제정하고 여러 대학이 신설되고 과학 기술 엘리트들의 육성에 나선다. 베른트 슈퇴버 지음,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p. 113.

중에 체류하는 폭격기 개발, 고체형 연료개발, 신속하게 발사 준비를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개발·투입, 위치를 노출을 피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술핵무기 확장까지 다양한 문제 해결 역량이 동원된다. 소위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 기동화를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체계를 고안한다. 이런 결정적 문제 해결 과정은 핵무기 기술시스템을 보다 단단하게 네트워킹하며 결속시킨다. ‘모멘텀(momentum)’은 기술시스템이 다양한 정치적·사회적·기술적 구성요소로 단단하게 네트워킹돼 변경하기 어려운 실제로 기능하게 되는 단계다. 일정한 내외부적 저항에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착되고 공고화되는 상태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기술시스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 정권 유지와 안보, 대미 협상력 제고,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한 대응 등에 맞게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 고도화의 기술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정치문화 및 가치체계, 지리적 조건, 규제 법령,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 ‘기술스타일’이 달라지는데, 북한의 경우 수령이라는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당-국가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란 점, 국내적으로 정치적 논쟁, 법적 규제와 절차, 국민 여론, 막대한 재원의 마련 절차 등을 생략하거나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문제로서 역돌출부들이 산재해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제재로 인해 핵무기 개발·실험·보유·유지를 위한 자원 제약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62/}

62/ 홍 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p. 295.

2.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와 대미협상 전략

북한이 추진한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 과정, 기술시스템 구축 과정 속에서 전략국가론이 어떤 담론적 위상과 긴장성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적 진화 과정을 대미 협상과 함께 살펴 보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10년을 주요 시기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핵무기 고도화 과정을 대미 협상 전개와 조율시키며 시기적으로 구분했다. 시기 구분은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의 주요 단계 또는 전환점, 북미협상 전개 과정을 반영해 4개의 단계로 설정했다.

그림 III-1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대미 협상 전개



출처: 필자 작성.

가. 1차 핵무기 고도화기(2013. 3 ~ 2017. 11. 29)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무기 고도화를 본격화하면서 1차 목표로 미국 본토에 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를 사활적으로 몰두한 시기에 해당한다.

표 Ⅲ-1 1차 핵무기 고도화기 주요 핵·미사일 활동

• 2012년	핵전략 및 국가전략 수립 전략로켓사령부 식별(3.3)
• 2013년	제3차 핵실험(2. 12) 경제·핵 병진노선 천명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령 제정
• 2013년 8월	국방기술현대화 4개년 계획 개시(완료: 2017. 8)
• 2014~2015년	근거리 유도무기체계 및 고체연료 개발 다발성 단거리 미사일 발사 증가 전략로켓군사령부 언급(2014. 4. 15) 전략군사령부 공식 사용(2014. 5. 29)
• 2016~2017년	중거리, 장거리 타격능력 향상 시도 (정밀도 향상, 사거리 확장 등) 제4차 핵실험(2016. 1. 6) 제5차 핵실험(2016. 9. 9) ▶ ‘전략적 지위 선언’
• 2017년 8월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예정, 백두엔진 개발 지연 ‘전략적 군종 대연합부대’ 언급
•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성공,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 ‘전략국가 선언’

출처: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59.

위의 <표 Ⅲ-1>의 1차 핵무기 고도화기 주요 핵·미사일 고도화 활동을 보면,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기 이전부터 핵무기 고도화 전략을 구상하고

세부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3차 핵실험부터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 행보로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핵 병진노선 채택, 4월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령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보통 기존 핵무기 개발 국가들이 극도의 기밀을 보안을 유지하며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기 고도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전시적 개발 패턴’이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초점을 둔 개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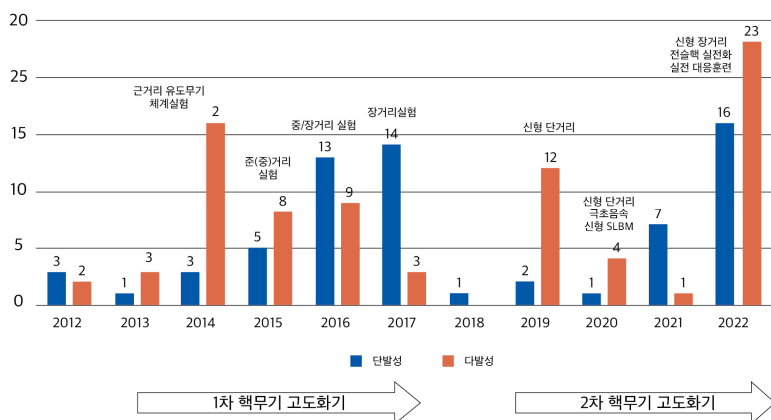
이 시기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핵폭발 능력 제고 양측으로 일련의 기술적 실험과 군사 조직 개편을 빠르게 전개한다. 2014~2015년 전술단거리 미사일(CRBM, SRBM) 다발성 발사, 전략군 공개 과시 → 2016~2017년 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MRBM, IRBM, ICBM) 단발 발사, 4~6차 핵실험 →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 전략국가 선언 등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행보를 신속하게 전개한다.^{63/} 우선 <그림 III-2>에서 보듯, 2014년에는 다량의 다발성 단거리 미사일이 이뤄지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 소진하면서 자신의 미사일 능력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단거리 일부와 준중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중심으로 다발성, 단발성 발사를 혼합한다. 2016년에는 단발성 중·장거리 미사일 중심으로 연이은 실험들이 이뤄진다. 2017년에는 장거리를 목표로 한 단발성 발사들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해마다 사거리를 늘려가며 기존 보유 미사일들의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신형 미사일 개

63/ 홍 민, “북한의 핵독트린 변화와 전략국가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편, 『2021 북핵총서』(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21), p. 83.

발과 연계하여 진화적으로 완성 모델을 찾아가는 경로를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정을 통해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판단하고 기존 미사일 체계의 개량, 외부로부터의 기술 도입, 신형 미사일 엔진과 모델의 개발 등을 모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미사일의 사거리별 능력 제고, 고체연료용 로켓엔진 개발, 핵폭발 능력 신장, 중장거리 미사일 모델 개발 등 4년에 걸쳐 매우 집중적 점검·개량·모델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 이후 사전에 기획된 형식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곧이어 ‘전략국가’ 용어를 등장시킨 것이다.

그림 Ⅲ-2 북한의 미사일 연도별 발사 패턴과 국방기술현대화 4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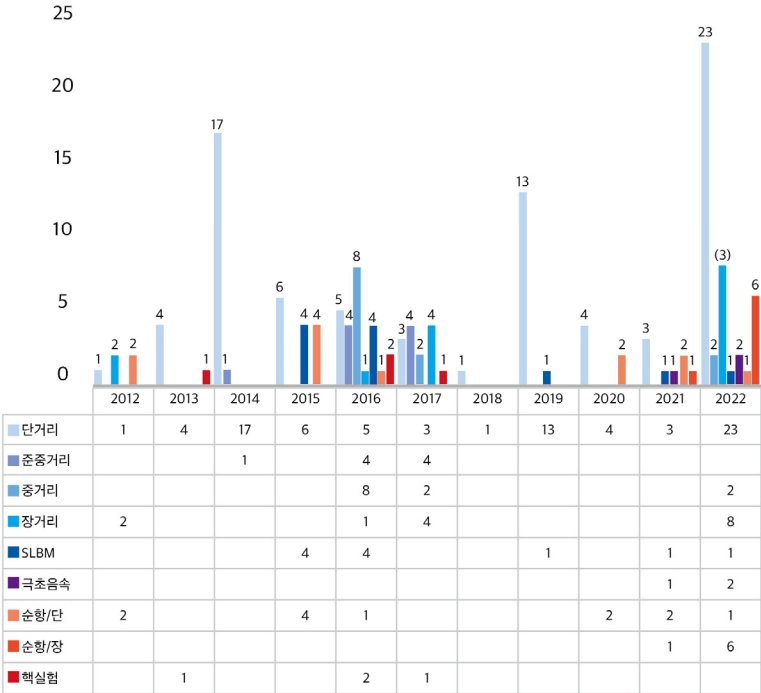
이렇게 짧은 기간 ICBM을 압축적으로 모델화하고 전시적으로 실험한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핵무기 고도화 프로세스와 완성 선언은 사전에 치밀한 개발 계획과 시간표, 정치적 기획을 통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시기 고도화의 행보에서 보였던 특징들이다. 첫째, 미국 본토 위

협이 가능한 ICBM 사거리 확보에 초점을 맞춘 부분, 둘째,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발사 실험 행보를 보인 부분, 셋째, 전시적으로 개발 및 실험 과정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점, 넷째, 핵무력 완성 선언을 신속하게 한 점 등이다. 바로 이 4가지의 특징이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본토 위협이 가능한 ICBM 사거리 확보에 집착한 부분이다. 미국에 대한 실제적 핵위협을 빨리 확보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 지위를 확보하고 확실한 협상 결과를 미국으로부터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4년의 시기를 ‘전략무기체계 개발 4개년 계획’ 시기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를 위해 일차적으로 핵폭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부에 보여주는 한편,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투발수단의 확보를 모색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발사 실험 행보가 갖는 의미다. <그림 III-3>은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사거리별 발사 현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2013~2017년 사이 북한은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로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별 발사 횟수



출처: 필자 작성. 2022년 12월 7일 기준 작성.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기존 보유 미사일의 능력 확인과 문제점 확인, 개량해야할 지점 파악, 초기 샘플이 되는 시제품 생산, 모방과 개량의 반복, 진화적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 결과적으로 ICBM 능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는 ICBM 확보에 목표를 두면서도, 한편으로 기존 보유 미사일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신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기였다고 볼 수 있다.

1차 핵무기 고도화에 해당하는 ‘전략무기체계 개발 4개년 계획’은 2013년 8월 시작하여 2017년 8월에 종료하는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7년 11월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는데, 원래 목표였던 8월에서 11월로 미뤄진 것은 소위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개발 추진했던 ‘백두엔진’의 개발에서 기술적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를 끝으로 전격적으로 ‘완성’ 선언을 한 것은 기술적 완성도를 갖췄다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완성’을 보여주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64/}

이와 같이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 직후 포괄적 수준에서 핵전략을 구상하고 여기에 맞춰 개발 계획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론컨대 핵전략의 열개의 두 축은 핵전력(핵능력) 확보, 핵독트린 제시로 볼 수 있다. 핵전력 차원에서는 미국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ICBM 사거리 확보, 한편으로 향후 개발해 전력화할 사거리별 미사일의 기본 시초 모델의 설계 및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을 가능성이 있다. 핵독트린 차원에서는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과 ‘전략국가’ 제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협상 지위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등장한 ‘전략국가’ 용어는 핵능력을 보여주고 협상 지위를 확보하려는 핵독트린 차원에서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전시적으로 개발 및 실험 과정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점이 갖는 의미다.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과정을 공개하는 전시적 모델 개발, 미사일 실험을 포함 핵무력 완성 선언 및 전략국가론 제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담론전을 펼친 부분 모두 볼 필요가 있다. 실제 개발 능력 및 속도와 대미 억제력 및 협상력 확보의 조급함 사이의 괴리를 메꾸려는 북한식 핵프로파간다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에도 북한은 하나하나의 실험을 전시적으로 공개하는 행보를 보여

64/ 홍 민, “북한의 핵독트린 변화와 전략국가론,” p. 83.

졌다. 2019년 5월부터 이어진 KN-23, KN-24, KN-25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 실험 전반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2021년부터는 선제적으로 무기 개발 계획을 공표하고 무기 실험의 내용은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핵무력 완성 선언을 신속하게 한 점이 갖는 의미다. 앞선 특징과 연속선상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 지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싶은 의도로 볼 수 있다. 기술적 도약과 협상 지위를 연계시켜 현상변경을 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는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억제력 확보, 협상력 제고, 궁극적으로 현상변경을 꾀하는 ‘전시적 핵무기 개발 모델’을 본격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보통 일정 사거리의 미사일 모델 한 종류를 개발할 경우 수년에 걸친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패턴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게 사거리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만약 기술적 완성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비공개 형태로 매우 장기적인 진행계획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은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을 전시적으로 실험 발사하고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급하게 ‘완성’ 선언을 했다.^{65/}

표 III-2 1차 핵무기 고도화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 전략적 목표	• 기술적 목표/전술적 태도
① 핵보유국 지위 확보 및 대외적 과시	① ICBM급 신형 미사일 기술 완성 (미 본토 타격 사거리 확보)
② 대미 억제력 확보	② 신형 중거리미사일의 전력화
③ 대미 협상력 향상	③ 기존 단/중거리 미사일 정확도 확인 및 향상

출처: 필자 작성.

65/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p. 60.

이 시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일차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대미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대미 협상력은 북미 양자 대화틀을 만들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인 대북적대 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비핵화 대 상응조치 협상 모색기(2017. 12 ~ 2019. 2)

이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일련의 북미협상을 모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가시적으로 드러난 핵·미사일 활동은 1건에 불과하다. 협상 국면임을 고려해 북한이 일체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시기 있었던 1건의 활동 내용이다. 2018년 11월 18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이 주관하는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김정은이 해안가 추정 발사장소에 수행원들과 서 있는 사진 1장을 공개한다. 미사일 발사 장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실무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오가는 시기였다. 자칫 미사일 실험 재개로 북한이 공들였던 북미 협상 구도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 발사 실험을 공개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협상 압박용으로 보지만, 한편으로 물밑으로 2차 핵무기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보도내용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랜기간 연구개발되어온 첨단전술무기....자기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킨 첨단전술무기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으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가 드디어 탄생하였다고, 저 무기는 유복자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였다.”^{66/}

일단 첨단전술무기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추론컨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작한 일련의 신종 단거리 미사일 개발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신형전술유도무기(KN-23)’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점도 그렇다. 또한 ‘오랜 기간 연구개발’되어 왔다는 표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으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라는 표현으로 추론컨대 이 무기는 이미 무기체계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돼 오던 무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기획된 무기가 김정은 시기에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5개월 후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앞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재개된 단거리 미사일 개발의 준비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이 시점에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1장의 사진을 통해 공개한 것은 당시 지지부진했던 북미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압박용 미사일 실험을 공개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였을까? 이 시기 북미 협상은 초기 북미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

66/ “새로운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 지도,” 『노동신문』, 2018.11.18.

하고 실무협상 단계에서 순탄하지 않았다. 여러 변곡점을 거치며 북한이 원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던 시기는 2018년 10월 전후로 보인다. 아래는 북미 협상 전개 과정을 4개의 변곡점으로 구분해 본 것이다. 아래 변곡점1과 변곡점2가 이 소설의 주 연구대상인 ‘비핵화 대 상응조치 협상모색기(2017. 12~2019.2)’에 해당된다.

■ 북미 비핵화 협상 4개의 변곡점

[변곡점1] 2018. 6. 12. ~ 2018. 10. 2.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 폼페이오 국무장관 3차 방북(‘18. 7. 6.)
- 리영호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종전선언 연연하지 않겠다”)

[변곡점2] 2018. 12. 20. ~ 2019. 2. 28.

- ‘새로운 길’ 첫 언급(‘18. 12. 20.)
- 김영철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 특사 방미(‘19. 1. 17.)
-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19. 1. 22.)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변곡점3] 2019. 4. 12. ~ 2019. 10. 23.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새로운 셈법, 연말시한, 새로운 길)
-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19. 6. 30.)
-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19. 10. 5.)
- 김정은 백두산 군마 등정(‘19. 10. 16.)
- 김정은, 금강산관광지구 철거 지시(‘19. 10. 23.)

[변곡점4] 2019. 12. 28. ~ 현재

-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정면돌파전, 전략무기 개발지속)
- 금강산관광지구 철거 집행 연기

- 대북전단문제 명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코로나19 최대방역체계 가동
-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전 비핵화 협상 불가(김여정 2020. 7. 11 담화)

첫 변곡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2018년 7월 6일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3차 방북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평양에서 만났던 북미는 현격한 기대 차이를 확인한다. 북한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조속한 시일내 종전선언 체결,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건 조성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등을 실무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예상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것이다.

다음의 <표 III-3>은 북한의 주장을 재구성해 북미 합의 이행구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표다. 이 표를 보면, 6.12 북미 공동합의문은 총 4개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항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교환구도에 입각해 있다.^{67/} 북미 공동합의문 서문에는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과 “완전한 비핵화”의 교환구도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68/}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를 상호주의에 입각해 동시적·단계적으로 주고받으며 진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69/}

67/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63.

68/ 위의 책, p. 63.

69/ 위의 책, p. 63.

표 III-3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합의 이행구조의 재구성

6.12 북미합의		선의의 조치 단계 (신뢰조성단계)	본격적 이행단계 단계 (비핵화-상응조치 단계)
1항	북미관계 개선	• 인적교류(예술단, 경제시찰단) • 연락사무소 개설 • 대북제재 유연화	• 대북제재 단계적 해제 • 상호 적대정책 철회 • 국교정상화 협상 및 국교수립 • 경제투자 및 경제협력
2항	한반도 평화정착	• 종전선언	• 평화협정 협상 및 체결 •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의체
3항	북한 비핵화	• 한미연합훈련 중단 • 핵·미사일 활동 중단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 동창리 실험장·발사장 폐기 참관	• 영변 핵시설 단계적 폐기 • 무기급 핵물질·핵탄두 단계적 폐기 • 전국 핵시설 폐기-제염
4항	미군 유해송환	• 미군 유해 송환	• 인도적 지원 및 협력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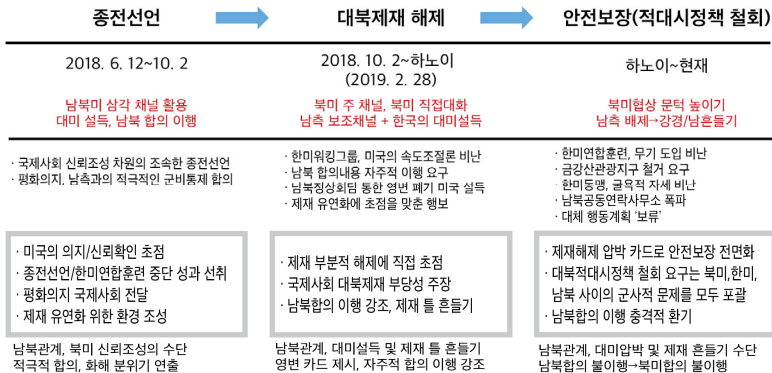
북한의 비핵화-안정보장 교환 로드맵은 크게 ‘선의의 조치 단계’와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로 구분된다. 6.12 북미정상 합의문의 4개항은 각각 이 두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당시를 ‘선의의 조치 단계’로 보고 핵·미사일 활동 중단, 북부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발사장 폐기(이상 3항 비핵화 부분),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4항 인도적 부분) 등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미는 2항의 평화체제에 해당하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하기로 구두합의 했다. 그리고 1항에 해당하는 관계개선과 관련 인적 교류 등이 향후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1항 관계개선 관련해서는 인적 교류나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유연화 등의 조치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런 선의의 조치를 통해 북미가 신뢰를 쌓고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것을 토대로 본격적인 비핵화·체제안전보장(비핵화-상응조치) 교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⁷⁰⁾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종전선언도, 한미연합훈련도, 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종전선언은 선의의 조치 단계에서 주고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을 한미가 먼저 하라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4개의 변곡점을 경유하면서 종전선언 → 대북 제재 해제 → 적대시정책 철회로 대미협상 요구 프레임을 변화시킨다. 북한은 대미 협상 프레임 변화에 따라 대남 전술적 태도 역시 변화시킨다. 종전선언 요구시기에는 남북미 삼각채널을 활용하여 북미 신뢰조성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관철되지 않자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 이 제재해제 요구 시기에는 북미 직접 대화에 집중하며 대미 설득 및 대북제재의 틀을 흔들기 위해 남북합의 이행을 강압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무위로 끝나자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문턱을 높인다. 대북적대시정책 요구 이후부터는 남쪽에 대해 금강산관광지구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미연합훈련 및 무기도입 비난 등 한국을 공세적으로 흔들며 대미 간접 압박을 가한다.

70/ 위의 책, p. 64.

그림 III-4 북한의 대미협상 요구 프레임 변화



출처: 필자 작성.

이 시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남북, 한미, 북미 삼각채널을 활용, 북미 직접 대화 및 정상급 담판에 주력한다. 한국 및 남북대화를 대미 접근 및 설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비핵화 조건부로 단계적 상응조치를 유도하려고 노력한다. 대북제재 해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군사적 위협 해소, 대미관계 정상화 등이다. 북한은 대미 신뢰도에 따라 비핵화 속도와 내용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취하는 행동의 신뢰 수준에 따라 비핵화의 의지, 이행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표 III-4 비핵화 대 상응조치 협상 모색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 전략적 목표

- ① 남북→한미→북미 삼각 채널 활용, 북미 직접 및 정상급 담판 주력
 - 한국 및 남북대화를 대미 접근 및 설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② 배핵화 조건부로 단계적 상응조치 유도
 - 대북제재 해제, 군사적 위협 해소, 대미 관계 정상화
- ③ 대미 신뢰도에 따라 비핵화 속도/내용 조절
 - 미국 행동의 신뢰 수준에 따라 비핵화 의지, 이행, 정도 조성

• 기술적 목표/전술적 태도

- ① 선의의 신뢰조치로 상호 의지 확인
 - 풍계리/동창리/모라토리엄-연합훈련중단, 종전선언
- ② 신뢰 확인 후 단계적 비핵화-상응조치 이행

출처: 필자 작성.

북한 뜻대로 북미 협상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고도화와 관련한 모종의 움직임을 재개할 준비를 한다. 바로 2018년 11월 18일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실험에 참관이었다.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시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움직임은 세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과거에 계획해 진행 중이던 무기 개발 계획을 북미 협상시기 보류했다가 재개를 결정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ICBM 사거리 확보에 집중했던 1차 핵무기 이후 후속 계획이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 신형 단거리 미사일 중심의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했을 가능성이다. 셋째, 이미 계획된 무기 개발 일정에 따라 북미 협상 시기에도 물밑에서 진행되던 개발을 살짝 표면화했을 가능성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론은 세 번째로 보인다. 우선 당시 보도에서 오랜 기간 이미 진행되어 온 계획에 따른 실험임을 밝혔다. 이것이 한 종의 무기를 개발하는 단일 계획인지 아니면 다종의 무기

개발을 동시에 연계 개발하는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구상·계획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2013~2017년 진행된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거리별 미사일을 매년 다발적으로 실험했던 행보로 봤을 때, 이 시기 새로운 대체 미사일 개발을 위한 점검과 설계, 실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검과 실험을 토대로 2018~2019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신형 미사일의 개발 실험이 계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북미 협상 국면이 펼쳐지면서 북한은 공개된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으로 이 스케줄을 일정하게 소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나의 추가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이란 해에 있었던 주변국의 움직임이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2018년 3월 의회에서 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6종의 최신예 무기들을 선보이며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연출한다. 당시 공개한 무기는 다탄두 ‘아방가르드(ICBM)’, ‘사르마트(ICBM)’, ‘킨잘’ 극초음속순항미사일, 핵추진 수중드론, 핵추진 순항미사일, 신형 레이저 무기 등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2018년 연말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공개하며 향후 저위력 핵탄두의 증강 배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BM)의 운용을 강조한다. 중국 역시 2018년 여러 차례의 ICBM 발사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러시아, 미국, 중국의 군비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차게 진행됐고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 러시아의 대유럽 군사적 대응이 거칠어지던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무기 개발을 통한 억제력 확보의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북한의 전략국가 용어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4월 이후 전략국가나 전략적 지위의 용법은 핵보유

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적인 중요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일반적인 용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특별한 대외적 메시지 용도보다는 국내적인 프로파간다의 일종으로 의미가 축소된다. 애초 전략국가 용어가 가졌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국이 되었으며, 핵무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미국과의 흥정물이 아니라는 비핵화 불가론의 본래적 뜻을 사용 빈도를 줄이고 일반적인 용법으로 변화를 주면서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략국가 용법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대미 압박 및 핵무기 고도화 재개 준비기(2019. 4 ~ 2020. 12)

이 시기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수모와 교훈에 입각하여 대미 회의론을 피력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대미 공세적 압박에 나서기 시작한다. 한편으로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협상력의 제고를 위해 2차 핵무기 고도화 구상과 계획 아래 단거리급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 2019년 4월 36년만에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말시한’까지 미국이 협상의 선행법과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압박하기 위해 그해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실험 활동을 재개한다. 일명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 ‘북한판 에이테쿠스’, KN-25 초대형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신형 무기들의 실험을 활발히 전개한다. 이런 신형 무기 실험의 재개는 화성-15형과 같은 ICBM만으로는 미국의 협상 태도를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다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고 미국을 실질적

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 통해 압박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위 화성-15형급 ICBM만으로는 미국을 움직일 ‘전략적 지위’, 온전한 ‘전략국가’ 대접을 받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북적대시정책 우선 철회’ 주장을 전면화하기 시작한다. 대북적대시정책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주장해 온 것으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외교적·경제적·군사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북 안전보장을 협상 조건으로 정면에 내세우는 수를 둔 것이다. 그러면서 안으로 주민들에게는 정면돌파전, 대미장기전을 선포하고 향후 북미 협상의 좌절을 대비한 선전전을 안으로 펼치게 된다. 이때부터 남측에 대해서도 냉대전략을 취하며 남측의 합의 불이행을 문제 삼고 남한 흔들기를 시작한다.

북한이 북미 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2차 핵무기 고도화 쪽으로 확실하게 경로를 공개적으로 분명하기로 결심한 것은 2019년 6월 30일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이후 8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대미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린 시기는 2019년 10월 김정은 백두산 군마 등정 때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새로운 웅략 결심’, ‘웅대한 작전’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금강산관광지구 현지도도를 통해 북한은 그 ‘웅략’의 시작을 남측을 통해 표출한다. 남측의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크게 보면 남측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흔들고 이를 통해 대미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정세를 다시 긴장으로 ‘반전’시킴으로써 미국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웅략이 구체적인 대미전략으로 공개된 것은 김여정 부부장의

2020년 7월 10일 담화를 통해서다. 소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대미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교훈에 따라 향후 북한이 취할 행보를 예고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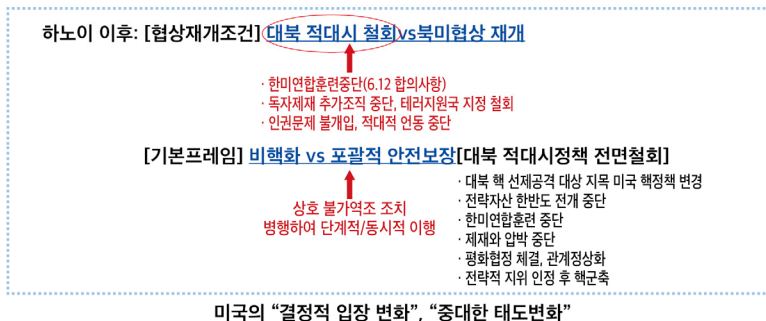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 초 하노이에 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 것 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증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71/}

사실상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갔던 북한의 판단이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전망적인 핵계획”을 다시 전면화하여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태도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안전보장(대북적대시정책 철회)을 전면에 제기하고 북러정상회담(4월), 북중정상회담(6월) 통해 ‘안전보장’ 문제를 환기시키며 전선을 넓히려 시도한다.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의 무기 구입을 비난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 활동을 재개하며 소위 말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북 제재 해제가 가장 절박한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인 ‘안전보장’으로 응수하며 무기 개발 프로세스로 압박을 가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 <그림 III-5>는 김여정 부부장이 제시했던 북한의 대미협상 요구사항의 변화 내용이다.

7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 7. 10.

그림 III-5 김여정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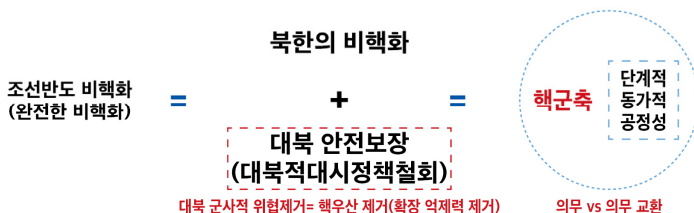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 부분적 비핵화[영변] vs 부분적 제재해제(핵심 5건)



출처: 필자 작성.

한편 ‘안전보장’ 협상 프레임을 통해 향후 북미 협상 구도를 ‘핵군축’ 성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 따라 북한이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 개념의 본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림 III-6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면화에 따른 비핵화 개념 변화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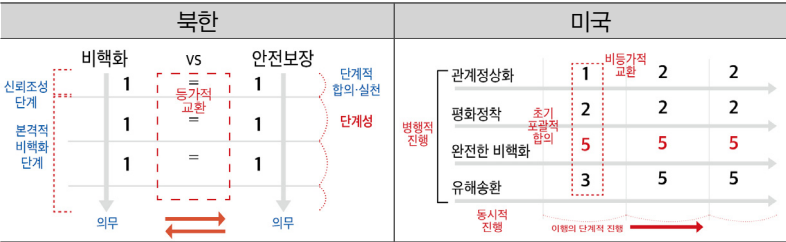
비핵화 대 대북적대정책 철회의 등가적 교환으로 구도를 만들게 되면,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력(핵우산)의 제거도 사실상 대북적대시정책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비핵화와 안전보장이 교환하는 ‘핵군

축’ 논리도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북한이 약속했던 ‘한반도 비핵화’가 협상 대응논리의 변화에 따라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확장억제력도 등가적으로 함께 제거하는 개념의 ‘조선반도 비핵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비핵화 범주

- ① 북한의 비핵화: 북한 지역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
- ② 한반도 비핵화: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한반도 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
- ③ 조선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핵억제력의 제거
 동시 진행

그림 Ⅲ-7 북미 양자의 협상 접근 방법의 차이



출처: 필자 작성.

기존 북미협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북미 양자의 접근방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4개 축을 중심으로 보면, 북한은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등가적, 단계적 교환을 기본 접근으로 한다면, 미국은 4개 축이 동시에 진행되긴 하지만 등가성을 전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기 포괄적 합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단계를 크게 신뢰조성단계와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로 구분하지만, 미국은 초기 신뢰를 북한의 선 비핵화 행동으로 본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표 III-5 북한과 미국의 북핵 접근방식 차이

	교환구도	이행방식	신뢰조치
북한	단계적 비핵화 vs. 단계적 안전보장	동시적·단계적· 등가적 → 공정한 교환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속한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미국	포괄적 비핵화 vs. 경제번영, 밝은 미래	동시적·병행적· 비등가적 → 선 비핵화, 후 보상	포괄적 비핵화 합의·실천

출처: 필자 작성.

그러나 북한이 제기한 안전보장(대북적대시정책 철회)의 경우 구체성이 부족한 채 너무 포괄적인 요구인데다, 현실주의 국제관계 차원에서 보면, 양자 협상에서 온전한 ‘등가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표 III-6 대미 압박 및 핵무기 고도화 재개기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

• 전략적 목표 ① 미국 태도 변화시킬 다종화된 전략무기 개발 · 모라토리엄 파기 및 협상 문 닫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무기 우선 실험 ② 미국 차기 정부 태도 여하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 개발 공개화 ③ 대미협상력 확보, 협상구도의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④ 비핵화론에서 핵군축론으로의 전환, 전략무기 개발 동결 자체를 협상 문턱화 ⑤ 대미 장기전 속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관리 강화 • 기술적 목표/전술적 태도 ① 한반도 전역 및 주일미군 주타격 대상 신형 단거리급 미사일 주력 ② 한미 미사일 방어망 틈새 확보, 전시증원 능력 위협 등 · ICBM으로 대체하기 힘든 전략적 공간 확보 주력 ③ 다종적인 사거리 타격 능력, 전략 및 전술핵무기 다종화 · 3종 단거리, 북극성-3형-4형 SLBM, 화성-17형 등

출처: 필자 작성.

한편 ‘전략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북한은 앞서 언급했듯이 신종 무기 개발에 나선다. 그런 예로 2019년 신년사, 4월 시정연설에선 ‘국가방위력 개선’, ‘국방과학’, ‘국방공업’을 강조한 바 있다. 2019년 4월부터 4종의 신형무기를 그해 총 18차례 발사하게 된다. 이 신형 무기들은 ‘전략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확실한 호소력을 가져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전술핵을 운용하기 위한 투발수단의 다종화가 핵심적인 이 시기 기술적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9년부터 북한은 ‘2차 핵무기 고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공식화하지만, 사실상의 2차 핵무기 고도화 계획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무기 개발의 기술적 목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스커드미사일의 현격한 열세를 극복할 대안 무기 개발이다. 한국의 진화된 대공 전력도 배경이다. 북한은 2020년 연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속에서 북미협상 판을 깨지 않으면서 일단 관망하는 자세, ‘휴지기’ 속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단거리급 재래식 전력 개선 일정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라. 2차 핵무기 고도화 대외적 공식화기(2021. 1 ~ 현재)

이 시기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통해 핵무기 고도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또한 2021년 6월 제8기 3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통해 북미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다. 미국의 화답을 기다렸으나, 7~8월까지 미국이 답을 하지 않자 북한은 한국 흔들기 통해 응답을 재촉한다. 기다림 끝에 북한은 미국이 대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9~10월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자

위-21 국방발전전략대회 연설을 통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을 공식화한다. 이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러 차례의 전략·전술 무기 실험이 필요했다. 이런 실험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은 이때부터 공세적인 주장과 행동을 하게 된다. 대남, 대미 차원에서 ‘이중기준’을 문제제기하는가 하면, 남측이나 미국이 더 이상 주적이 아니라는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일반 국가의 자위권 차원의 무기개발이란 논리를 제시한다.

북한은 2022년 들어 1월부터 극초음속미사일 포함을 하여 10월 현재 총 26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한다. 한편으로 연초부터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핵실험 및 ICBM 실험 유예 약속을 파기할 수 있음을 밝힌다. 1월 30일에는 급기야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실전배치 및 양산체계 돌입을 알린다. 이후 화성-17형 발사, 신종 단거리 무기 세트의 실전화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2019~2020년 진행된 신종 무기(전술핵탄두 탑재 가능) 개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2021년에는 무기 개발 ‘계획’을 외부로 공식화한다.金正은의 주요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공개적으로 ‘핵무기 고도화’를 하겠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강해지겠다’는 목표로 전략·전술핵무기 고도화 완수를 우선 목표로 밝힌 것이다. 기존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특수론’에서 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의 합법적 권리라는 개발 논리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한다. 여기에 더해 2022년 9월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 법령’을 제정하고 공세적인 핵교리를 공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金正은은 ‘비핵화 불가론’,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론’을 밝힌다.

표 III-7 2021년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밝힌 전략무기 개발 계획

-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방향
 - ①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
 -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 ③ 1만 5천 km 사정거리 내 다양한 전략적 대상에 대한 타격 능력 확보
 - 미국 본토, 미 태평양 함대, 미 제7함대, 주한미군 등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능력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
- 제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전략무기 개발 5대 핵심과제 추정
 - ①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미사일
 - ② 수중 및 지상에서 발사되는 고체형 ICBM
 - ③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 ④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
 - ⑤ 무인정찰기 등을 제시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종화·다층화된 무기 능력을 공개했다. 우선 1월 5~27일 발사 주로 전략적 반경 1,000km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선제 및 보복능력에 해당하는 무기를 공개했다. 둘째, 2021년 1월 31일 화성-12형 발사는 1,000~5,000km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제8차 당대회 전략무기 개발 방향 중 하나는 1만 5천 km 사정거리 내 다양한 전략적 대상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발사 행보는 미국 본토, 미 태평양 함대, 미 제7함대, 주한미군 등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능력의 고도화’를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보여주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72/} 2022년 26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15,000km 내에 있는 전략 대상에 대한 타격 능력을 사정거리별로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73/} 이런 행보는 ‘불가역적 핵고도화’, ‘비핵화의 현실

^{72/} “北, ICBM보다 한 단계 낮은 IRBM 발사…미국 위협 강화,” 『뉴시스』, 2022.1.30.

적 불가능성 인식’, 향후 ‘대미 제한적 핵군축’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의 일환으로 평가가 가능하다.^{74/}

표 III-8 바이든 정부의 대북 메시지 결정적 타이밍

- 김정은 제8기 3차 당 전원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화 메시지 발신했으나 미국은 적절하게 화답하지 않아 협상 재개 국면 조성에 실패
- 김정은 위원장은 4월 말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완성 선언에 응답해 북한도 대미전략을 완성했으며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 있다고 발언
- 대북적대시정책 언급 없이 정중한 외교적 어법으로 대화 의제 제시
 - ① 국가 존엄 인정(비방 및 인권공세 중지, 관계정상화)
 - ② 평화와 안전에 대한 담보(군사적 위협, 한미연합훈련, 평화의 제도화 등)
 - ③ 자기발전 이익 인정(대북제재 해제)
-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급 화답으로 구체적 대화 수용 메시지 없이 사실상 방치
-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협상 의지나 선행 변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
 - 6~7월 미국의 답을 기다리다, 7월 말~8월 남한 흔들기 통해 신호 독촉
- 기다림 끝 9~10월 전략무기 개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핵무기 고도화의 우선 완수로 확실하게 방향 선회

출처: 필자 작성.

- **전략적 목표**
 - ① 핵무기의 불가역적 완성
 - ② 비핵화가 아닌 제한적 핵군축(핵군비통제) 전환
 - ③ 일반국가의 합법적 자위권적 행동 무기개발 논리 전환(특수론→일반론)
- **기술적/전술적 태도**
 - ① 비핵화의 불가능성을 인식시킬 다종화된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개발/과시
 - ② 미중, 미러 갈등/대치 국면 적극 활용, 5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신속한 개발 실험
 - ③ 국제사회 반발에 외무성 중심 건조한 대응

출처: 필자 작성.

73/ 위의 글.

74/ 위의 글.

이런 일련의 북한 행보는 ‘전략적 지위’, 전략국가의 위상을 보다 확고하게 확보하기 위해 ICBM과 같은 사용 문턱이 높은 무기보다는 실전화를 통해 위협도를 높일 수 있는 전술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다중화하여 다양한 사거리로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행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태도 변화의 특징은 다음 3가로 볼 수 있다. 대외적 환경의 인식, 선 핵무기 고도화 후 대미협상, 미국과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다.

우선 대외적 환경의 인식 측면에서 보면, 김 총비서 연설에서 ‘더욱 불안정해진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편 가르기식 대외정책, 신냉전구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1년 6월 제8기 제3차 당 전원회의에선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한 입장과 원칙 수립, 유리한 환경으로의 활용, 정세의 안정적 관리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대미전략’이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정치, 국제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한 위에 수립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군비경쟁, 미국정치 등 불안정한 정세를 대미 접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이후 핵무력정책 법령에서 국제적인 ‘핵태세’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둘째, 선 핵무기 고도화, 후 대미협상이라는 구도의 완전한 변화다. 사실상 대미 협상 가능성을 일단 당분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우선 강해지자는 분명한 전략적 기초 발신, 국가방위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국사’라는 표현이다. 핵심 주장은 ‘전략전술 무기 개발·생산의 가속화’, 전략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핵무기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것

이다. 크게 보면 한국의 무기 증강에 대응한 측면이 있다. 김 총비서는 연설 곳곳에서 이에 대해 날선 비난을 하고 있어 그만큼 북한에게 초조함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한 군비경쟁과 동북아 군비 경쟁,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속에 북한은 ‘선 핵무기 고도화’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미국과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의 측면이다. 대내외 매체에서 대미 비난 사라진지 2년이 넘었고 한국이나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면서 단골로 주장하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조차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게도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한국의 대북한 관점, 도발에 대한 피해의식을 버리라고 주문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신 등장한 것이 ‘합법적 자위권’, 전략무기 개발이 일반국가의 주권 행사로서 합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3. 핵무기 고도화 전략과 전략국가론의 함의

가. 핵무력정책 법령 제정과 전략국가론^{75/}

북한은 2022년 9월 8~9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의 운용·통제·사용의 doktrin을 담은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0여 분에 걸친 시정연설을 했다. 김정은은 법령 제정 배경을 설명하며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 간의 대립과 투쟁’, ‘긴장 격화된 정세’, ‘전쟁억제력 강화’, ‘비

^{75/} 연구과정에 분석된 내용을 연구원 발간 온라인 시리즈에 반영하여 게재하였음. 홍민·홍제환,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26, 2022.9.15.).

핵화 불가론' 및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론' 등을 역설했다.^{76/}

핵무력정책 법령 관련해서는 핵독트린을 법적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배경과 목적, 향후 과업 등을 언급하며 대외적으로 핵무기를 통한 '억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했다. '억제'는 표면적으로 대미 억제에 있었지만, 동북아에서의 전쟁 방지, 국권수호 및 국익사수 차원의 '전쟁' 자체에 대한 억제 역시 주요하게 강조했다.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되거나 확정되는 상황에 대한 '억제'의 측면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연설 초반부부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의 불가피성'이라는 프리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는 '제국주의연합'과 '패권주의'로 신냉전적 진영화를 해석하는 부분이다. 결국 "국가 주변의 군사적 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 있고 "이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억제'는 다의적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77/}

한편 '비핵화 불가론' 및 '핵무기 고도화 불가역론'을 분명히 했다. 단기적으로는 비핵화 원칙에 기초한 한미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무력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인식과 태도의 근본적 전환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78/} 이미 2019년 이후 북한의 비핵화 문턱 높이기와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입장은 가시화돼 왔다. 이번에 밝힌 핵독트린 역시 이미 2009년 외무성 비망록, 2013년 <핵보유국 법령>을 주요 기점으로 '선제핵타격' 가능성을 언급해 왔던 것에 연속선상에 있다. 일부 구체성을 추가한 것 이외에 핵정책 자체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왜 현시점에 법령과 연설을 통해 핵정책을 법적 형식으로 재확인했는가이다.^{79/}

76/ 위의 글, p. 2.

77/ 위의 글, p. 2.

78/ 위의 글, p. 3.

힌트는 “국가주변의 군사적 정세”, “긴장 격화된 정세”를 군사력 강화의 ‘명분’과 ‘기회’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을 자극하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격화되고 장기화하는 미중, 미러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이 시간을 내부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의 호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맞는 핵무력 강화를 한다고 법령에 명시한 부분은 핵실험을 비롯한 파급력이 강한 행동을 주변 정세에 조용해 시점을 설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런 명분과 기회의 공간이 커지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와 정책이 커지고 공동전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80/}

한편으로 기술적, 정치적 여건상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핵실험을 대신하여 핵독트린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의지와 억제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령 제정과 시정 연설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호전성을 독트린 형식으로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과 맥락상 한미의 북핵공조와 확장억제력 강화, 미중·미러 갈등·대치 구도에 대응하여 대미 및 대전쟁 ‘억제’의 효과, 전략적 운신의 공간 확보, 북중 또는 북중러 공동전선의 형성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81/}

전체적으로 호전성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정세의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의 장기화 등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및 민생분야에서 성과 제시보다는 기존 경제 운영 기조에 대한 재언급이 주를 이뤘고, 식량 및 소비품 공급 개선을 사활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민생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방역 능력 향상

79/ 위의 글, p. 9.

80/ 위의 글, p. 9.

81/ 위의 글, p. 10.

및 백신접종 실시 등을 강조, 자연적 집단 면역 이후 변이종 확산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읽혀진다.^{82/} 이번 핵무력정책 법령의 공개는 핵무기 지휘통제 및 운용의 전권을 쥔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 위상과 지배력 과시의 측면, 각종 내부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회에 대한 결속과 통제력 확보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83/}

김위원장 시정연설에서 핵정책 법령 채택 의도는 크게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하는 차원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긋는 차원이다. 전자는 핵정책의 법령화를 통해 대내외에 핵무기 관리·운용·사용의 체계와 원칙을 공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핵전략에서 차원에서 보면 대미 ‘억제’(deterrence)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핵 개발 및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선제공격에 중점을 두는지 2차 보복공격에 중점을 두는지, 주요 표적이 누구인지 등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전략’을 통해 상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의도다. 후자는 대외적으로 비핵화 불가론을 천명함으로써 상대의 인식과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협상전략 또는 외교전략 차원이다.^{84/}

핵전략(nuclear strategy)의 출발점은 ‘억제’(deterrence)다.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핵전략은 내용상 핵전력(nuclear force)과 핵독트린(nuclear doctrine)으로 구성된다. 핵전력은 핵전략의 하드웨어적 요소로 핵능력, 실질적인 물리적 ‘능력’에 해당한다. 핵독트린은 핵전략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핵무기 운용전략에 해당한다. 핵전력과 핵독트린을 잘 결합하여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 핵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capability), 의사전달(communication), 신

82/ 위의 글, p. 3.

83/ 위의 글, p. 9.

84/ 위의 글, p. 3.

뢰성(credibility)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능력’이란 핵무기를 통해 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다. ‘핵전력’에 해당한다. ‘의사전달’이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적이 어떠한 범주의 행위를 해선 안 되고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보통 핵보유 국가들은 공식적인 성명 발표(선언), 지도자의 연설 및 발언, 법적·제도적 차원의 규정,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 등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의사를 최대한 분명하게 전달하려 한다. ‘신뢰성’은 특정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핵사용이 실제로 실행될 것이고 대가가 충분히 지불될 것임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전달과 신뢰성은 ‘핵독트린’에 해당한다.^{85/}

우선 이번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및 김 위원장 연설은 ‘억제’의 차원에서 읽을 수 있다. 무기실험 및 무력시위를 통한 ‘능력’ 과시와 함께 실질적인 핵 운용에 관한 법적, 정치적 선언을 통해 보다 확고한 대미 ‘억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데서 자기의 중요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에게 명확하게 자신들의 핵사용 원칙과 상황을 인지도함으로써 미국의 북한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선제공격타격이나 핵무기 사용 의지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86/}

그러나 이런 ‘억제’ 메시지의 다의성도 주목이 필요하다. 대내외 조성된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다. “주변의 군사적 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하고 있다든가 “사회주의와 제국

85/ 위의 글, pp. 3~4.

86/ 위의 글, p. 4.

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미중 및 미러 갈등·대결이 첨예화되면서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주변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익’ 차원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의 문제, 북한이 참전을 요청 또는 강요받을 때, 전쟁이 한반도로 확산될 때 등이다. 원치 않는 전쟁 자체를 억제하거나 연루 및 참전 요구를 억제하는 문제 등 ‘전쟁 억제’의 측면이 실제로 담겨 있을 가능성 있다.^{87/}

사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급변하고 불확실한 정세에 대한 언급, 특정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전쟁억제력’에 대한 언급을 빈번하게 해왔는데, 이런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법령 제정과 김 위원장 연설은 기본적으로 ‘대미 억제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편으론 대중국, 대러시아 메시지도 성격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박, 대북한 고립·봉쇄에 대응해 중국 및 러시아와 외교적·군사적·경제적 협력 차원의 공동전선에는 일정하게 참여하지만, 원치 않는 전쟁의 발발, 확산, 연루, 참전 요구, 대리전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주권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북한식 전쟁억제력’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주적 결단’,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 등의 표현도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88/}

둘째, 억제와 함께 핵무기 운용·통제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돼 있어야 “통제 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남용되거나 불

87/ 위의 글, pp. 4~5.

88/ 위의 글, p. 5.

순한 이익실현에 도용되어 임의의 순간에 인류를 무서운 핵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을” 규제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 핵무기 통제권을 확실하게 공표하여 급변사태를 방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핵정책법령 및 김 위원장 연설은 협상전략 및 대미전략 차원에서도 계산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비핵화 불가론’ 및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의 천명이다. 우선 향후 비핵화 의제로 협상을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협상 프레임의 전환, 나아가 미국의 대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9년 미국의 선행 변화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 협상, 2020년에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연설과 법령 제정은 높은 문턱(조건)의 비핵화 협상 여지조차 아예 제거했다는 점에서 미국 및 한국의 북핵 접근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행동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및 미국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무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최근 한미의 북핵 공조 및 한미확장억제력 강화 움직임,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에 대한 북한식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89/}

둘째,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이다. 미국의 적대정책과 외부의 핵위협이 지속되는 한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적대정책이나 한국의 전력 증강 등을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 군사력 강화의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전에

89/ 위의 글, p. 5.

상응한 무기 개발, 첨단 전략전술 무기체계의 실전화를 통해 ‘전쟁억제력’을 비상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을 다양화해서 ‘핵전투태세’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언급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의 NPR에 대한 모방형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2022년 미국의 NPR은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8년 NPR과 유사하다는 평가에 기초해서 참고하면, 소위 유연성에 기반한 맞춤형 핵전략으로 억지력 강화다. 저강도 핵무기(전술핵무기) 개발과 배치, 소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것에 상응해서 북한의 모방형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90/}

대미 협상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북한 접근의 근본적 전환 - 핵 포기 불가 속에서 북미간 제한적인 핵군축 또는 핵군비통제 접근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강화”하고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겠다고 명문화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대응해 북한판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전술핵무기 개발과 실전화를 통한 대미 억제력 확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정책, 동북아 핵군비경쟁, 미중 대결 국면 전개 양상에 따라서도 핵무기 증강 명분, 핵무기의 ‘사명’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91/}

이번 시정연설과 법령 공개는 ‘북한판 핵태세검토보고서’, ‘북한판 안보전략지침’에 2018년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했던 국정연설을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법령 내용 역시 2018

90/ 위의 글, pp. 5~6.

91/ 위의 글, p. 6.

년 7월 러시아가 대통령령으로 채택한 ‘기본원칙’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번 핵무력정책 법령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 형식과 내용에 있어 모방적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 연설은 저장도 전술핵무기 및 첨단무기 개발 및 배치 계획을 공개하며 미국에게 경고를 보냈던 2018년 3월 1일 푸틴 대통령의 2시간에 걸친 의회 연례 국정연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첨단무기를 공개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대응해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등 첨단무기 개발 및 배치계획을 공세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이 내용에 충격으로 2018년 말 NPR을 통해 저장도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배치 등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동북아 핵군비경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번 김 위원장 연설 역시 과시적으로 구체적 핵독트린을 공개하고 확장적 ‘전술핵 운용’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파급력을 노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92/}

이번에 제정된 핵무력정책 법령의 특징은 핵무기 운용 교리의 구체화다. 법령 서문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궁극적 지향’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목적’, ‘핵태세 구성’, ‘핵정책 및 교리의 목적’ 등을 명문화했다. 이들 내용은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하 〈핵보유국 법령〉)는 없던 내용이다. 미국의 NPR을 상당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태세’를, 핵억제력(능력), 핵무력정책, 핵무기사용전략 등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이고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적인 핵무기 운용의 차원에서 명문화했다. 제9조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수정보강), 제3조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수정보강), 제4조 핵무기사용결정의

92/ 위의 글, pp. 6~7.

집행(신설), 제6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신설), 제7조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신설) 등을 통해 운용적 교리를 대폭 구체화했다.^{93/}

핵독트린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핵무기 운용과 관련된 군사적·안보적 차원의 교리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차원의 교리이다. 전자가 핵무기 보유 또는 사용 명분(억지, 보복), 사용 범주, 사용 방법, 운용, 타이밍(선제공격, 보복공격), 가용자원, 지휘·통제, 관리·감독 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핵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략적 가치, 국제적 핵규범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는 것이다. 2013년 <핵보유국 법령>을 비롯해서 최근까지 북한의 핵독트린은 주로 궁극적 목표 차원의 교리를 중심으로 표명돼 왔다. 반면 이번 법령을 통해 핵무기 운용 교리 중심으로 대폭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94/}

특히 북한이 법령 제6조를 통해 신설한 ‘핵무기 사용조건’ 5가지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호전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왜 이런 구체화를 했는가에 대한 배경과 의도를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NPR에 대한 모방형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2018년 NPR은 ‘유연한 맞춤형 핵억지전략’(flexible, tailored nuclear deterrence strategy)을 통해 핵무기 및 비핵 공격 억지,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보호, 억지 실패시 미국의 목표 달성 등을 제시했고 저장도의 핵단두를 탑재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극단적 상황’으로 핵무기 사용 상황을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핵공격 이외에도 재래식 공격에도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북한이 줄곧 미국의 ‘선제핵타격’ 위협에 대해 비난해 온 것도 이런 맥

93/ 위의 글, p. 7.

94/ 위의 글, pp. 7~8.

락 아래서이다. 북한이 이번 법령을 통해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명시한 상황들은 대부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억제’ 심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95/}

한편 핵독트린은 핵 프로파간다(nuclear propaganda)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핵 프로파간다는 핵·미사일을 정치적·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전술적 차원에서 수사적 장치(rhetorical device)로 활용하는 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냉전기부터 핵무기 관련 프로파간다는 기본적으로 ‘안보’와 ‘공포’라는 두 선동적 요소에 맞춰졌다. 하나는 대내외적으로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안보 차원에서 선전하는 측면, 다른 하나는 상대에게 핵무기 보유를 통해 공포를 주입하는 선전의 측면, 상대의 핵위협으로 갖는 불안감을 감추는 위장적 선전의 측면이다. 북한의 핵 프로파간다는 국내적으로는 주민 결속, 리더십 부각, 정권의 치적 및 능력을 과시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정치기술적 요소들을 내포한다. 한편 핵무기와 관련된 대외적 선전·선동을 통해 적국이나 타국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외교적·상징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이번 법령 제정은 이런 핵프로파간다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96/}

나. 전략국가 주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실 정치의 일반적 현상

‘전략국가’ 용어의 용법 변화를 전체적 추이 차원에서 보면, 이 용어에서 표현하는 ‘국가’의 존재 위상은 ‘대미 실제적 핵위협 가능 국가’ → ‘지역 정세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 → ‘세계질서의 전략적 안정자’ 등의 순으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용

95/ 위의 글, p. 8.

96/ 위의 글, pp. 8~9.

법은 북한의 과장된 자기규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보면, 일정부분 현실화된 부분이 있다.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면, 미국은 실제적 위협을 덜 느끼고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력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했을까? 지역 정세는 더 안전해졌을까? 미중 군사적 격돌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고 더 안정적으로 변했을까?

전략국가론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국가론은 단순히 레토릭이나 위상을 과장하는 언어적 허언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핵능력 신장에 따른 자기의 권리와 위상을 요구하는 현실 정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전쟁의 승리만큼 파급력이 큰 것은 핵실험이나 핵무기 시위라고 할 수 있다. 힘을 직접 투사하지 않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전략국가는 그런 자기 힘에 대한 권리 주장, 지위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게는 더 이상 ‘불량국가’ 취급하지 말고 핵능력에 걸맞는 국가 위상을 재설정하고 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핵무장국가로서 실질적 능력을 갖췄으니 위상을 인정하라는 것은 향후 용어가 바뀌더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 정세 운용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위상 설정 가능성

크게 보면 전략국가로 표현하고자 했던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핵무기 ‘보유’ 그 자체에서 정세 운용의 전략적 수단 쪽으로 변화해 왔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용법 변화는 기술적 측면과 지역 질서 변화의 측면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거리의 핵탄두 투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

미 억제 측면뿐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하는 무기의 사정거리 내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가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하는 전쟁 억제력 차원에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대미 억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전략적 위상, 무기의 전략·전술 운용의 반경이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반영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라. 북미 협상 가능성이 좁아질수록 전략국가 용어의 효용성 감소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지위에 올라섰다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략국가 또는 전략적 지위 용어가 대내외 모두가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매체를 통해 주로 공개됐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내적 정당화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2019년 이후 전략국가 용어의 사용 빈도수가 줄어든 것은 북미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전략국가의 위상을 보다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희석되고 아주 일반론적인 의미만 남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전략국가의 장기전략, 핵군축 또는 맞춤형(비례적) 억제전략

한편으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대미 실질적 핵위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과거 실질적 위협 능력이 없었을 때 위협도를 과장하고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전략국가’라는 용어의 필요성이 절실했을 수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미국 본토에 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레토릭이 현실에서

실제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미국을 향한 위상 및 협상력 확보를 위한 사활적인 행보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직접 협상 대상이 되기 위상 위상 확보, 양자 회담시에는 미국의 쉼법을 바꾸기 위한 위상 확보, 그리고 현재는 보다 장기적으로 핵군축 또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식 ‘전략적 균형’까지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북한용으로 투사하는 억제력에 대해 맞춤형으로 자신의 능력을 대응시키는 방식이다. 가령 미국이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면 그것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미 최소억제, 대남 확증보복, 대일 억제능력 등 일정한 자위력을 갖춘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수 있다. 확실한 확증보복은 아니더라도 최소 수준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전략국가의 경로, 북한식 양탄일성과 경제발전 전략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이 가장 활발할 때인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때는 미국의 소련에 대한 집중도 높을 때이다. 지금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국제질서와 지역 정세 차원에서 미국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 양탄일성을 완성해야 대내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핵무기와 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의 경험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에게는 이런 경험이 매우 호소력 있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중의 전략경쟁 심화는 북한에게는 2차 핵무기 고도화

의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공간을 열기 위한 안보의 시간일 수 있다.

사. 실질적 전략국가 행보에서 남한은 정세관리용 수단적 대상화

주목할 부분은 전략국가 행보에서 남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다. 사실상 남북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전략적 기조나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남북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고 남북 대화를 시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김정은 정권이 과거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남한은 실질적 전략국가로 가는 행보에서 정세운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수단화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북한에게 전략적 의미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2018~2020년을 경유하며 얻은 것이 없다는 확신,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력에 더 이상 균열을 가하기 어렵다는 판단, 미중 전략갈등 심화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남북이 관계 개선할 동기는 없다는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되 미국에 대해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면서 대등함을 높이는 추세로 갈 것이다. 미국과의 갈등 구도에 있는 러시아, 중국은 북한의 이런 전략적 제휴조차 절실할 수 있다. 중단기로는 핵을 통한 안보, 중력 중심의 접근을 할 것이다.

IV. 결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전략국가론은 한편에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이 전략국가론을 표방할 당시 기대했던 효과만큼 바라던 현실이 펼쳐졌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대미협상, 핵독트린 효과, 대외관계 재설정,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한 대응, 무기 개발의 실질적 성과 등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관계 정상화, 대미억제력 확보, 국제관계 재설정, 군비경쟁 속 안전 확보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그러나 2017년과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인식,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냉철하게 자문해 본다면, 변화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크게 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고강도 대북제재에 불구하고 존재한 부분,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북한문제를 미국 정책 우선순위로 끌어올린 부분, 북한의 요구내용과 대미 인식을 전 세계에 전달한 부분, 2차 핵무기 고도화 추진을 통해 2017년보다 훨씬 위협적인 무기를 보유하게 된 현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와 공동 전선을 펼치며 고립에서 탈피해 있는 부분 등 2017년과는 확연하게 변화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전략국가론은 단순한 레토릭이나 자기 과시로 치부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실 정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핵보유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등장했던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나 미국 본토를 실제적으로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했던 ‘전략국가’란 용어 역시 애초의 최소 수준의 의미가 지극히 확장적으로 의미화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전략국가론 자체가 의미 있게 자기 변용과 목표 수정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전략적 아이덴티티로서 기능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파생적 자기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공세적 핵교리로의 변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략국가’를 지능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국가론은 이 용어의 지속 뿐만 아니라 유사 파생적 전략국가론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아이덴티티로 오히려 더욱 전략국가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너무 대미 관계 중심으로 북한의 행보를 보지 않는 시야 역시 필요하다. 2018년 한반도 정세 전환을 대미 중심으로 보면 교착과 결렬, 실패로 평가할 수 있으나, 북중 및 북러관계로 보면 그것은 드라마틱한 성공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전략국가적 전환 속에는 대미뿐만 아니라 대중, 대러 관계의 변화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보면,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라는 원칙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핵화의 원칙을 입구로 삼아 북한을 압박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되 사실상의 비핵화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들어 올 수 있는 입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로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입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상호안전보장의 입구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 한국, 미국 모두가 상호 안전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입구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협상의 창구다. 상호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방안들을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현해 나가는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사실상의 비핵화’ 효과를 거두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상기·홍 민·구갑우·이혜정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베른트 슈퇴버 지음.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서울: 역사비평사, 2008.
- 위비 바이커 외 지음. 송성수 편저. 『과학 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전거, 형광등, 미사일, 전기자동차, 항공기의 일생을 통해서 본 현대 사회』. 서울: 새물결, 1999.
-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토머스 휴즈 저·김정미 역. 『테크놀로지·창조와 욕망의 역사(Human-Built World)』.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편. 『2021 북핵총서』.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21.
- 홍 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홍 민·강채연·박소혜·권주현.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Lee, Rachel Minyoung. *Understanding North Korea's Public Messaging: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NCNK, 2022.
- Hughes, Thomas P. "The Evolution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 Wiebe E. Bijker, Thomas P. Hughes, and Trevor

J.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 New Direction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ss: MIT Press, 1987.

2. 논문

변정범. “전략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근본요인.” 『철학연구』. 제3호, 2018.

송성수. “에디슨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술시스템론.” 이상욱 외.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자들 ‘기술’을 성찰하다』 서울: 동아시아, 2009.

이상민.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세종정책브리프』 2022-05호, 2022.

홍 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3. 기타 자료

『내일신문』.

『뉴시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사』.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

홍 민·홍제환.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26. 2022.9.15.).

이상민. “북한의 전략도발 전망 및 대응.” 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 연속
기획시리즈(핵정치와 군비경쟁, 기로에 선 한반도) 발표문.
2022.7.13.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홍제환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문선혜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2020-08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정호 외
2020-24	‘자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정책연구시리즈〉

-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 · 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 · Opening'
 Park, Young-Ja · Jeong, Eun Mee · 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 · Yee, Ji Sun · 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 · 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인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 · 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과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재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은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사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인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KINU Insight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한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1 (2021)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1, No. 2 (2022)

기타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일 일 성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통일연구원

값 6500 원



9 791165 891220

ISBN 979-11-6589-122-0